

조사기간(2023.4.15.~5.10.)

Executive Summary

K I N U
통일의식
조사
2023

한국의 핵개발에 대한 여론

연구책임자

이상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민태은(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윤광일(숙명여대 교수)

구본상(충북대 교수)

차례

I. KINU 통일의식조사	9
1. 연구목적	10
2. 코호트 분석	11
3. 조사 개요	11
4. 조사결과 요약	12
 II. 한국의 핵보유와 여론	 17
1. 한국 핵보유의 필요성	18
2. 미국핵 재배치의 필요성	21
3. 통일 후 핵보유 찬성	22
4. 주한미군과 한국의 핵보유	23
5. 핵보유에 수반되는 위기 가능성에 대한 태도	25
6. 핵무기 보유의 조건	28
7. 한국의 국내정치와 핵보유	30
8. 핵비확산조약 체제에 대한 태도	32
 III. 한미관계와 한국의 핵보유	 33
1.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신뢰	34
2.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	36
3. 확장억제의 효과성 평가	37
4. 확장억제와 한국의 핵개발 필요성	38
5.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39
6. 주한미군의 필요성	40

7. 한미동맹의 필요성	41
8. 지난 1년간 한미관계 평가	42
9. 미국의 한국 국익 배려	43
10. 한중 분쟁 시 미국의 지원 가능성	44
11.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한 의견	45

IV. 북한의 핵위협과 한국의 핵보유 47

1. 남북 재래식 군사력 비교	48
2. 대북 경제제재와 북한 비핵화	50
3. 남북대화와 북한 비핵화	52
4. 북한신문과 방송의 시청 허용	54
5. 북핵위협에 대한 우려	55
6. 북핵위협에 대한 관심	56
7. 북한과 핵전쟁 발발 가능성	58

V. 동북아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여론 59

1. 한중관계 평가	60
2. 미중의 패권경쟁에 대한 태도	62
3. 중국의 미국 추월 가능성	64
4. 중국의 대만 공격 전망	66
5. 양안 관계: 중국-대만 분쟁 시 한국 개입 필요성	67
6. 한일군사동맹	69
7. 일본의 핵개발 정당성	72
8. 일본의 핵개발 전망	74

VI. 한미정상회담이 여론에 미친 영향 75

1. 주변국 호감도	76
------------------	----

2.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 인식: 현재의 위협	77
3.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 인식: 미래의 위협	78
4. 남한 핵보유에 대한 태도	79
5.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 변화	80
6. 확장억제의 효과성 평가 변화	81

표 차례

<표 I - 1> KINU 통일의식조사 조사기간 일람(2014~2023)	10
<표 I - 2> KINU 통일의식조사의 한국 사회 코호트 분류	11
<표 I - 3> 2023년 4월 조사 개요	11
<표 II - 1> 핵보유 태도 교차분석(2023)	23
<표 III - 1> 한미관계 평가(전체응답자 기준)	42
<표 V - 1> 한중관계가 나빠진 이유	61
<표 V - 2> 중국의 미국 추월 가능성 전망: 코호트별	65
<표 V - 3> 한국의 외교범위	68
<표 V - 4> 대중 및 대북 한일동맹에 대한 찬반: 지지정당별	70
<표 V - 5> 일본의 핵개발 정당성: 지지정당별	73
<표 V - 6> 일본의 핵개발 정당성: 코호트별	73
<표 VI - 1> 한미정상회담 전후 주변국 호감도 변화	76
<표 VI - 2> 한미정상회담 전후 주변국을 현재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정도 변화	77
<표 VI - 3> 한미정상회담 전후 주변국을 미래의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정도 변화	78
<표 VI - 4> 한미정상회담 전후 남한 핵보유 태도 변화	79
<표 VI - 5> 한미정상회담 전후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 변화	80
<표 VI - 6> 한미정상회담 전후 미국 핵우산 정책의 효과성	81

그림 차례

<그림 II - 1> 핵보유 찬성 여론의 변화	18
<그림 II - 2> 핵보유 찬성: 지지정당별	20
<그림 II - 3> 미국핵 재배치 찬성: 지지정당별	21
<그림 II - 4> 통일 후 핵보유 찬성: 지지정당별	22

<그림 II - 5> 주한미군과 한국 핵보유	23
<그림 II - 6> 핵보유에 수반되는 위기 가능성에 대한 태도	25
<그림 II - 7> 한국 핵보유 시 미국의 태도 예측: 지지정당별	26
<그림 II - 8> 핵개발 위기 조건에서의 핵개발 동의 여부	28
<그림 II - 9> 핵무기 공약과 투표의향: 지지정당별	30
<그림 II - 10> 핵무기 공약과 투표의향: 코호트별	31
<그림 II - 11> NPT 체제 동의 여부: 지지정당별	32
<그림 III - 1>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신뢰: 지지정당별	34
<그림 III - 2>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신뢰: 코호트별	35
<그림 III - 3>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 대한 신뢰: 지지정당별	36
<그림 III - 4> 확장억제의 효과성 평가: 지지정당별	37
<그림 III - 5> 확장억제와 한국의 핵개발 필요성: 지지정당별	38
<그림 III - 6>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예측: 지지정당별	39
<그림 III - 7> 주한미군의 필요성: 현재와 통일 이후	40
<그림 III - 8> 한미동맹의 필요성: 지지정당별	41
<그림 III - 9> 한미관계 개선평가: 지지정당별	42
<그림 III - 10> 미국의 한국 국익 배려: 지지정당별	43
<그림 III - 11> 한중 분쟁 시 미국의 지원 가능성: 지지정당별	44
<그림 III - 12>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한 의견: 지지정당별	45
<그림 IV - 1> 남북 재래식 군사력 비교	48
<그림 IV - 2> 남북 군사력 비교	49
<그림 IV - 3>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성: 지지정당별	50
<그림 IV - 4> 남북대화의 효과성: 지지정당별	52
<그림 IV - 5> 북한신문과 방송의 국내 허용에 대한 여론: 지지정당별	54
<그림 IV - 6> 북핵위협에 대한 우려: 지지정당별	55
<그림 IV - 7> 북핵위협에 대한 관심: 지지정당별	56
<그림 IV - 8> 핵위협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지지정당별	57
<그림 IV - 9> 북한과 핵전쟁 발발 가능성(2016~2023)	58

<그림 V - 1> 한중관계 평가	60
<그림 V - 2> 미중의 패권경쟁에 대한 태도	62
<그림 V - 3> 중국의 미국 추월 가능성	64
<그림 V - 4> 중국의 대만 공격 전망	66
<그림 V - 5> 중국-대만 분쟁 시 한국 개입 필요성	67
<그림 V - 6> 한일군사동맹에 대한 태도	69
<그림 V - 7> 일본의 핵개발 정당성	72
<그림 V - 8> 일본의 핵개발 전망	74

Executive Summary



Executive Summary

K I N U
통일의식
조 사



I

KINU 통일의식조사

I. KINU 통일의식조사

1. 연구목적

■ KINU 통일의식조사는 대면조사(face-to-face survey)를 통해,

- (1) 국민들의 통일, 북한, 통일·대북정책, 북한이탈주민, 남북통합과 안보관, 주변국에 대한 인식과 그 변화를 연구하고,
- (2) 이러한 인식을 결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밝히며,
- (3)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는 통일·대북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KINU 통일의식조사 연혁

- KINU 통일의식조사는 2014년부터 자료를 축적해왔음. 2019년부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차례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본 요약보고서에서 별도의 표기가 없다면 2023년 4월에 조사된 자료의 통계임.

<표 I - 1> KINU 통일의식조사 조사기간 일람(2014~2023)

조사차수	조사연도	조사기간
1	2014년	9월 22일 ~ 10월 6일
2	2015년	7월 27일 ~ 8월 14일
3	2016년	6월 2일 ~ 6월 24일
4	2017년	3월 21일 ~ 4월 14일
5	2018년	4월 5일 ~ 4월 25일
6	2019년 1차	4월 5일 ~ 4월 25일
7	2019년 2차	9월 7일 ~ 10월 8일
8	2020년 1차	5월 20일 ~ 6월 10일
9	2020년 2차	11월 10일 ~ 12월 3일
10	2021년 1차	4월 26일 ~ 5월 18일
11	2021년 2차	10월 21일 ~ 11월 22일
12	2022년	4월 6일 ~ 5월 2일
13	2023년	4월 15일 ~ 5월 10일

2. 코호트 분석

■ KINU 통일의식조사의 코호트

- KINU 통일의식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의 탄생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코호트 분류법을 사용하고 있음.
코호트 분류는 기존 연구들을 문헌조사하여 결정하였음.

<표 I - 2> KINU 통일의식조사의 한국 사회 코호트 분류

코호트	탄생년도	조사빈도 (2023년 4월)	비율(%)
전쟁세대	1950년 이전 출생	77	7.7
산업화세대	1951년~1960년	171	17.1
386세대	1961년~1970년	212	21.2
X세대	1971년~1980년	178	17.8
IMF세대	1981년~1990년	152	15.2
밀레니얼세대	1991년 이후 출생	211	21.1
합계		1,001	100.0

3. 조사 개요

<표 I - 3> 2023년 4월 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표집틀	2023년 3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표집
표집방법	2023년 3월 주민등록인구현황에 근거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표본단위	총 1,001명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조사방법	대면면접조사 (PI: Personal Interview)
조사기간	2023년 4월 15일 ~ 5월 10일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4. 조사결과 요약

■ 2023년 조사소개

- 2023년 KINU 통일의식조사는 “한국의 핵개발에 대한 여론”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음.
- 한국의 핵개발 및 이와 관련된 태도를 묻는 40여 문항을 신규로 개발하여 기존문항에 추가하였음.
- 조사 기간 중인 2023년 4월 27일에 한미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었음.
 - 조사 시작 시점인 4월 15일에서 4월 26일까지 504명이 응답했으며, 4월 27일부터 조사 종료일인 5월 10일까지 497명을 추가 조사했음.
 - 이는 일종의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 조건을 형성함. 이를 통해 한미정상회담이 한미 관계 및 한국의 핵보유에 대한 여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했음.

■ 한국의 핵보유와 여론

- 같은 문항으로 핵보유 필요성을 꾸준히 질문해온 KINU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최근 핵보유 필요성에 대한 여론은 언론보도와 달리 상당한 폭으로 하락했음을 보여줌.
- 2021년에 핵보유 찬성여론이 가장 높았다가(71.3%) 2022년부터 이미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음.
 - 22년 69%, 23년 60.2%
- 2021년에서 2023년 사이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이 오히려 빈번해지고 대중국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핵보유 필요성 하락은 국내정치적 요인 및 자체적 핵보유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장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의 핵보유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의 자체 핵보유를 찬성하는 여론이 약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핵을 남한에 재배치할 것을 요구하는 여론도 2021년 이후로 하락하고 있음.
 - 21년 61.8%, 22년 60.4%, 23년 53.6%

- “귀하는 우리의 국방을 위해 주한미군 주둔과 핵무기 보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2023년 조사에서 49.5%가 주한미군 주둔 선택, 핵무기 보유는 33.8%에 그침.
 - 이 문항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한국인들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라는 전통적 방식의 안보 시스템을 보다 신뢰한다는 점임.
- 한국의 대중은 한국이 실제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다면 여러 가지 심각한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음. 그리고 미국이 한국 핵개발에 부정적이라는 점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음.
- 한국이 핵개발을 시도할 경우 닥쳐올 수 있는 여섯 가지 위기 가능성을 제시하고 핵개발 필요성을 물은 결과, 핵개발에 동의하는 비율은 36~37% 수준으로 하락함. 이는 다른 핵보유 찬성여론이 70%를 넘는다는 다른 연구기관의 조사결과와 매우 대조적인 결과임.
- “선거에서 후보나 정당이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다면, 귀하께서 이 후보나 정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음.
 - 그 결과, 48.7%의 응답자들이 “핵무기 개발 공약은 나의 투표에 중요한 기준이 아니다”라고 답변함. 핵무기 개발 공약을 내세우는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답변은 17.7%에 불과한 반면, 오히려 그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답변은 33.7%에 달함.
 - 젊은 세대일수록 핵무기 개발 공약을 내세운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많았고, 전쟁세대와 산업화세대에서 상대적으로 핵무기 공약 지지가 높았음.
- 핵비확산조약(NPT: Non-Proliferation Treaty) 체제에 대한 높은 지지가 발견되었음. 전체 응답자들의 68.2%가 비핵국가들의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현 체제에 동의했음.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의 동의율은 74.9%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65.3%보다 훨씬 높았음.

■ 한미관계와 한국의 핵보유

- 한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핵우산 정책을 신뢰하며, 그 정책을 통해 한국이 북핵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함.
 - 전체 응답자의 72.1%, 국민의힘 지지자의 85.3%가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신뢰한다고 답변함.
 - 전체응답자의 68.5%, 국민의힘 지지자의 75.6%가 핵우산 정책 때문에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함.

- 90%의 응답자가 주한미군이 현재 필요하다고 답변. 그러나 통일 이후에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4.3%였으며 이는 2022년 조사의 60.0%에서 하락한 것임.
 - 미중갈등의 본격화가 주한미군의 장기적 역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됨.
-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응답은 계속 90% 이상을 유지했으며, 2022년의 경우 95.1%로 최고를 기록함. 그러나 올해는 87.2%로 하락함.
 - 이 변화의 원인은 한국 국내정치의 양극화에서 기인했을 가능성 있음. 즉, 현정부의 한미관계 강화노력이 오히려 정부에 비판적인 야당 지지자들의 한미동맹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낮추었을 수 있음.
- 전체응답자 중 지난 1년간 한미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27.7%로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반면 더 나빠졌다는 응답은 10.4%로 낮았고,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은 61.9%였음.
- 2020년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35%가 미국이 한국의 국가 이익을 고려한다고 답했는데, 2023년에는 46.4%로 상승함. 상승폭은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에서 컸음(62.8%). 반면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2020년 이후 큰 변화 없음.
-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0.8%가 그 필요성을 인정함. 국민의힘 65.3%, 민주당 78.3%였음. 지지정당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전작권 이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한미동맹의 필요성이나 미국에 대한 선호와는 별개로, 주권의 중요한 부분인 전시작전통제권은 온전히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여론 합의가 존재함.

■ 북한의 핵위협과 한국의 핵보유

- 핵무기를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는 경우,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의 군사력과 대등하거나 약간 열세에 있는 것으로 인식함.
- 그러나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군사력을 기준으로 하면, 북한이 남한보다 약간 약하거나(28.1%) 훨씬 약하다(29.1%)고 생각하는 비율이 과반(57.2%)으로 나타남.
- 경제제재와 북한과의 대화가 모두 북한 비핵화에 큰 효과가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경제제재가 북한 비핵화에 효과없다는 응답이 72.9%, 남북대화가 북한 비핵화에 효과없다는 응답이 66.2%

- “최근 북한 신문이나 방송을 한국에서 볼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북한방송 허용에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1.3%가 북한방송 허용에 찬성함.
- 45.1%의 응답자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답함.
- 그러나 북한 핵위협에 대해 관심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4.9%에 그침.
- 북한의 핵위협이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비율은 더욱 낮았음. 국민의힘 지지자(19.1%), 민주당 지지자(19.7%), 지지정당이 없는 응답자(15.9%) 모두 비슷하게 낮은 수준의 응답임.
- 10년 내 북한과의 핵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예측은 2023년 조사에서 소폭 상승함.

■ 동북아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여론

- 이번 조사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다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일 년 사이 한중관계가 더 나빠졌다고 평가한 응답자가 약 13% 증가함.
- 미국이 중국보다 패권경쟁에서 우위에 서기를 바란다는 응답은 21년 10월 조사보다 약 6% 감소하고, 중국이 우위에 있기를 바라는 응답은 3.7% 증가함.
 - 미국 우위 선호 53.4%, 중국 우위 선호 9.9%
- “중국의 국력이 미국을 따라잡아 새로운 초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답을 선택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는 응답이 61.4%로 추월할 수 없다는 응답 38.6%보다 약 23% 높음.
 - IMF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비율(70.4%)로 중국의 추월을 예상함.
- 중국이 가까운 시일 내에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38.6%였음. 낮다는 의견은 39.6%로 비슷함.
- 52.8%의 응답자가 한국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답변함.
-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군사동맹에 동의하는 비율이 52.4%로 동의하지 않는 비율 47.7%보다 4.8% 높은 것으로 집계됨.
 - 대북 한일군사동맹에 대한 지지보다 약 3% 많은 55.5%의 응답자가 대중 한일군사동맹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러한 높은 한일군사동맹에 대한 지지율은 미중경쟁 격화로 역내 냉전 구조가 형성되면서 국민 다수가 한일군사 협력을 지역 안보 차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으로 판단됨.
- 밀레니얼세대가 한일군사동맹에 상대적으로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 전체응답자의 52.6%가 일본도 핵으로 위협받는다면 자국 안보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할 권리가 있다고 응답함.
- 일본의 핵무기 개발 정당성에 동의하는 응답 비율(52.6%)보다 약 22% 높은 74%가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됨.

■ 한미정상회담이 여론에 미친 영향

- 올해 통일의식조사 표본추출은 '워싱턴선언(Washington Declaration)' 전후로 대략 절반씩 (이전 504명, 이후 497명) 이루어졌음. 이는 일종의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 조건을 형성함. 4월 27일 전후 여론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이를 워싱턴선언의 효과로 볼 수 있음.
-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 일본,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는 상승한 반면, 중국과 북한에 대한 호감도에서 유의한 변화는 없음. 특히, 미국에 대한 인식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전반적으로 향상됨.
-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기시다 총리의 답방(조사 시점에서는 예정) 외에도 한미정상회담의 결과가 미국과의 관계를 넘어 일본과의 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리라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일본을 현재의 군사적 위협으로 보는 인식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한미정상회담을 전후로 일본의 미래적 군사적 위협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게 개선되었음.
-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한국의 핵보유를 찬성 비율은 59.9%에서 60.6%로 상승했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음. 즉 남한의 자체 핵무장을 포기하는 대신 확장억제 강화를 명문화한 '워싱턴선언'이 한국인의 핵무장 지지 여론 자체를 바꾸었다고 보기 어려움.
 - 반면,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대한 신뢰 비율은 68.7%에서 75.6%로 상승했음.
 -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미국의 핵우산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긍정 비율은 약간 증가함.

Executive Summary

K I N U
통일의식
조사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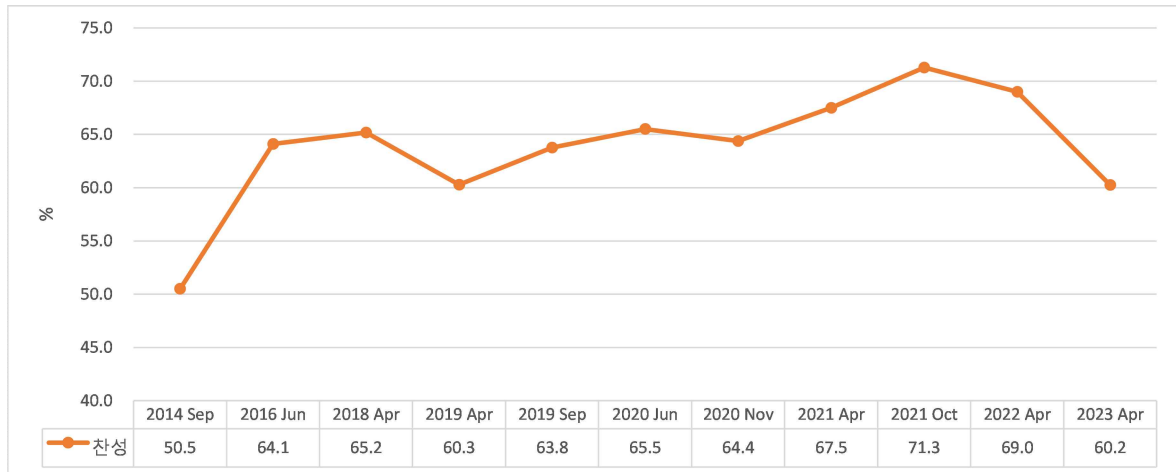
한국의 핵보유와 여론

이상신 (통일연구원)

II. 한국의 핵보유와 여론

1. 한국 핵보유의 필요성

<그림 II - 1> 핵보유 찬성 여론의 변화



■ 조사문항

- KINU 통일의식조사에서는 2014년부터 아래의 세 문항을 사용하여 핵무기 보유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조사해 왔음. 이 문항들을 통해 조사된 결과를 정리하여 위 그래프로 표시하였음.
- 2014년 조사문항: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하여야 한다”
 - 1=매우 반대한다, 2=다소 반대한다, 3=다소 찬성한다, 4=매우 찬성한다.
 - 3+4=“핵보유 찬성”
- 2016년 및 2018년 조사문항: “귀하는 남한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1=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 현재 국방력으로도 충분하다; 2=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 재래식 무기(기존 무기)를 기반으로 해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 3=미국의 전략 핵무기를 대한민국에 배치해야 한다; 4=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
 - 3+4=“핵보유 찬성”
- 2019년 이후 조사문항: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남한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남한 핵무장 절대 반대; 2=남한 핵무장 어느 정도 반대; 3=남한 핵무장 어느 정도 찬성; 4=남한 핵무장 매우 찬성.
- 3+4="핵보유 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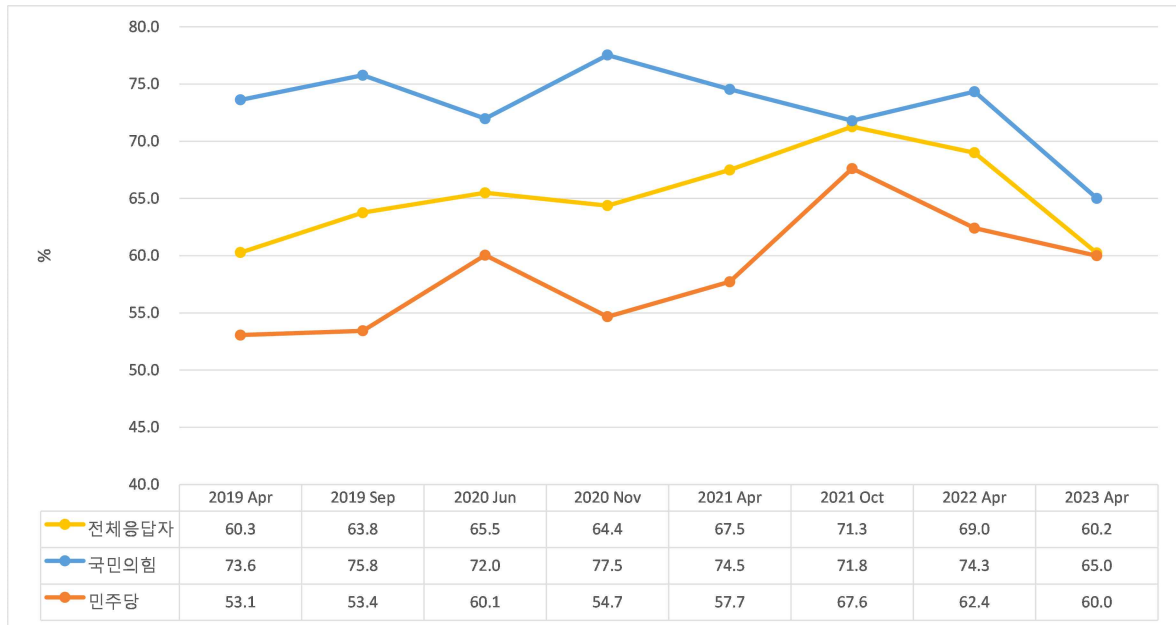
■ 핵보유 필요성 여론의 하락

- 최근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다는 여러 언론보도가 있었음. 이에 따르면,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71.0%), 아산정책연구원(70.2%), 샌드연구소(74.9%),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55.5%), 통일과나눔재단(68.1%), 최종현학술원(76.6%) 등의 조사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의 비율이 70%가 넘거나 근접한 것으로 조사됨.¹⁾
- 그러나 같은 문항으로 핵보유 필요성을 꾸준히 질문해온 KINU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최근 핵보유 필요성에 대한 여론은 언론보도와 달리 상당한 폭으로 하락했음을 보여줌.
- 일부 정치인 혹은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된 한국의 독자적 핵보유에 대한 논의가 일반 대중의 차원에까지 확산되면서, 핵개발 및 보유에 따르는 여러 문제점과 비용 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이런 하락 추세는 2023년에 시작된 것이 아님. 2021년에 핵보유 찬성여론이 가장 높았다가 2022년부터 이미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음.
- 2021년에서 2023년 사이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이 오히려 빈번해지고 대중국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핵보유 필요성 하락은 국내정치적 요인 및 자체적 핵보유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장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 2022년에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의 핵보유 여론이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과 언론보도가 있었음.²⁾ 즉, 우크라이나가 핵을 가지고 있었다면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한국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늘어났다는 주장임. 그러나 실제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조사된 2022년 KINU 통일의식조사에서 이미 핵보유 찬성론이 하락하기 시작했음. 따라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의 핵보유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1) "국민 76.6% "독자 핵 개발 필요"... 거세지는 '독자 핵무장론'," 『동아일보』, 2023.1.30.

2) "In South Korea, Ukraine War Revives the Nuclear Question," *New York Times*, April 6,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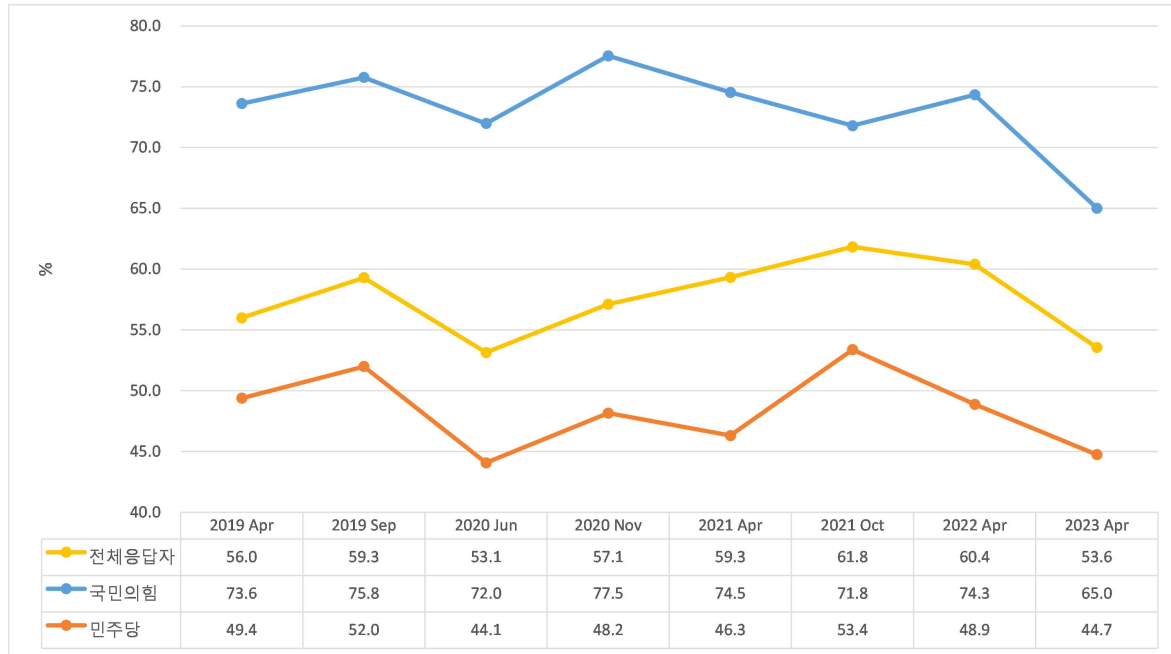
<그림 II - 2> 핵보유 찬성: 지지정당별



- 지지정당별로 핵보유 필요성 여론을 비교해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핵보유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음. 그러나 2022년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의 74.3%가 핵보유를 찬성했던 것에 비해, 2023년에는 65.0%로 하락했음(<그림 II - 2>).
- 민주당 지지자들은 핵보유 필요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거나, 2023년 조사를 기준으로 60%가 핵보유에 찬성했음.

2. 미국핵 재배치의 필요성

<그림 II - 3> 미국핵 재배치 찬성: 지지정당별



■ 조사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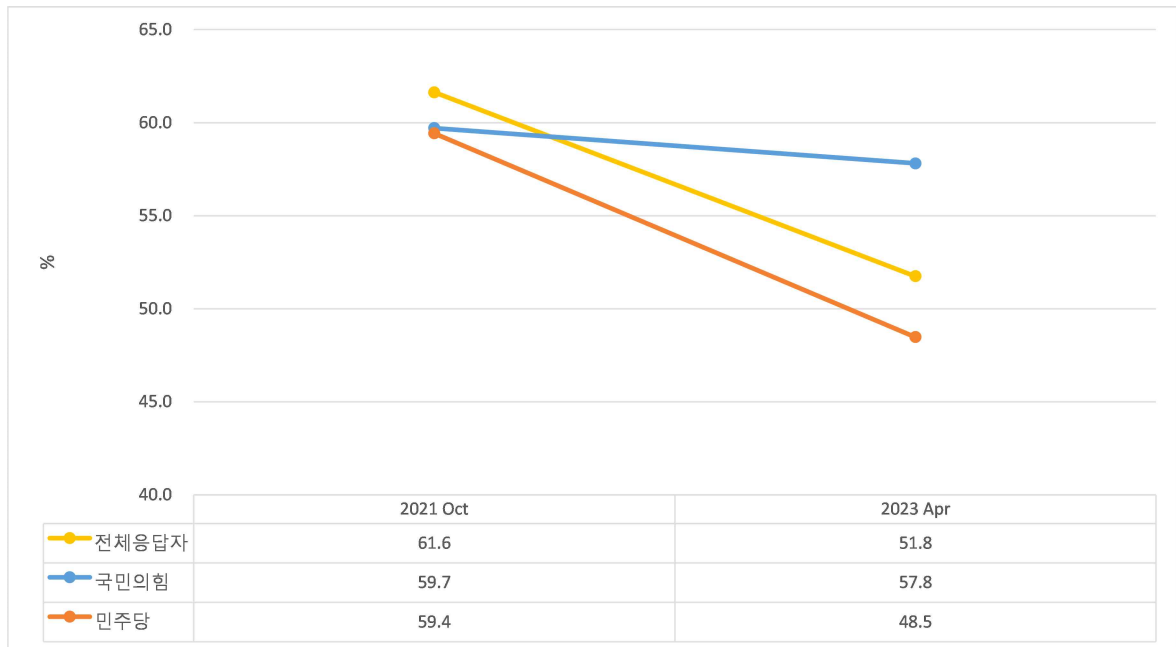
-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핵무기를 남한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미국 핵의 재배치를 절대 반대한다; 2=미국 핵의 재배치를 어느 정도 반대한다; 3=미국 핵의 재배치를 어느 정도 찬성한다; 4=미국 핵의 재배치를 매우 찬성한다.
 - 3+4=“미국핵 재배치 찬성”

■ 핵재배치 찬성 여론의 약화

- 한국의 자체 핵보유를 찬성하는 여론이 약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핵을 남한에 재배치할 것을 요구하는 여론도 2021년 이후로 하락하고 있음. 그 하락의 이유도 동일한 것으로 추측됨.
- 국민의힘 지지자의 경우도, 2022년에 미국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4.3%에서 2023년 조사에서는 거의 10% 가까이 떨어진 65.0%를 기록함.
- 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 핵재배치 찬성 여론이 과반 이하로 줄어든 44.7%로 조사되었음.

3. 통일 후 핵보유 찬성

<그림 II - 4> 통일 후 핵보유 찬성: 지지정당별 비교



■ 조사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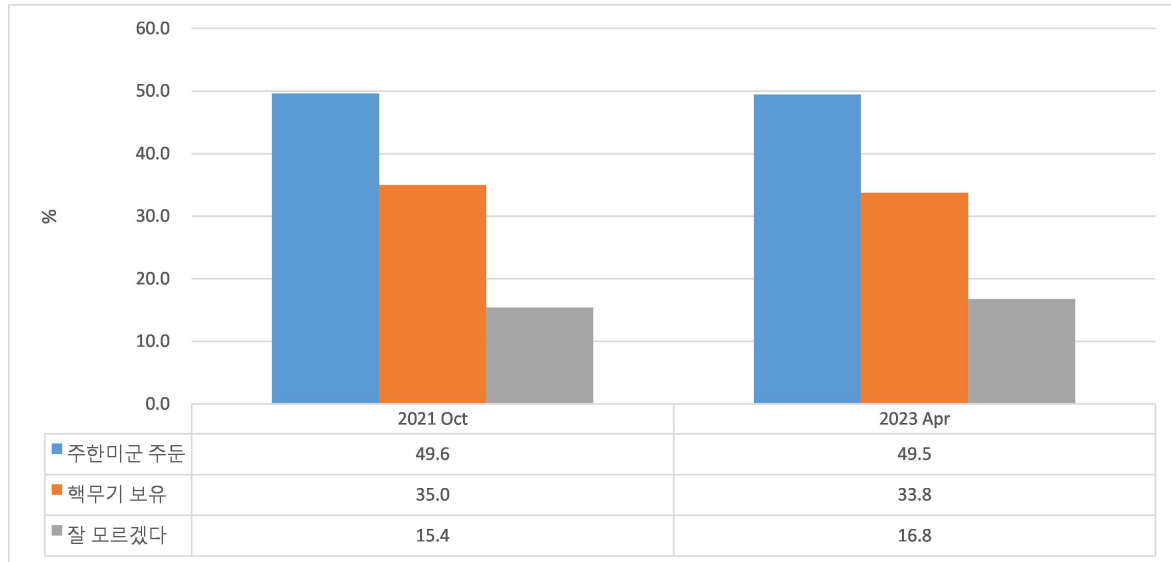
- “귀하는 남북이 통일된 이후에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절대 반대한다; 2=어느 정도 반대한다; 3=어느 정도 찬성한다; 4=매우 찬성한다.
 - 3+4=“통일 후 핵보유 찬성”

■ 통일 후 핵보유 필요성에 대한 찬성 의견 하락

- 핵보유 및 미국 핵 재배치에 대한 여론 변화와 마찬가지로, 통일 이후에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여론도 하락 추세임.
-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 하락 추세가 59.7%에서 57.8% 정도로 상대적으로 적었음.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11% 가깝게 하락하였으며, 전체 응답자에서도 10% 정도의 하락률을 보였음.

4. 주한미군과 한국의 핵보유

<그림 II - 5> 주한미군과 한국 핵보유



■ 조사문항

- “귀하는 우리의 국방을 위해 주한미군 주둔과 핵무기 보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1=주한미군 주둔; 2=핵무기 보유; 3=잘 모르겠다.

■ 핵보유보다 동맹을 통한 안보 선호

- 단순히 한국의 핵보유에 대한 찬반을 물었을 때 2023년 조사에서 60.2%가 핵보유를 찬성함. 그러나 주한미군 주둔과 핵무기 보유 중 선택하라고 질문했을 때 절반 가까운 응답자들이 핵보유보다 주한미군을 선택.

<표 II - 1> 핵보유 태도 교차분석(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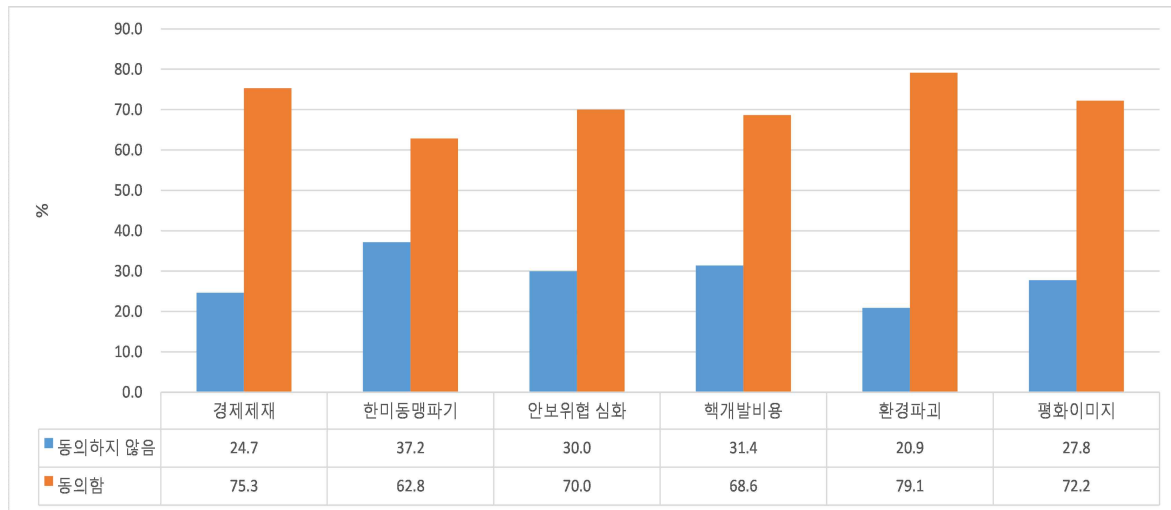
(단위: %)

		주한미군 주둔과 핵무기 보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주한미군	핵무기 보유	잘모르겠다	합계
한국 핵보유에 대한 태도	핵보유 반대	58.5	20.4	21.1	100
	핵보유 찬성	43.5	42.6	13.9	100
	합계	49.5	33.8	16.8	100

- 한국의 핵보유를 찬성했던 응답자 중 43.5%가 주한미군과 핵보유 중 하나를 고르는 문항에서는 주한미군을 선택함. 대조적으로 핵보유를 반대했던 응답자들은 핵무기 보유로 의견을 바꾼 비율이 20.4%에 그침.
- 이러한 태도 변화는 지금까지의 많은 여론조사에서 핵무기 보유 찬성률이 60%에서 70% 이상으로 조사된 이유가 지나치게 단순한 설문 디자인 때문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줌.
- 이 문항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한국인들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라는 전통적 방식의 안보 시스템을 보다 신뢰한다는 점임.

5. 핵보유에 수반되는 위기 가능성에 대한 태도

<그림 II - 6> 핵보유에 수반되는 위기 가능성에 대한 태도



■ 조사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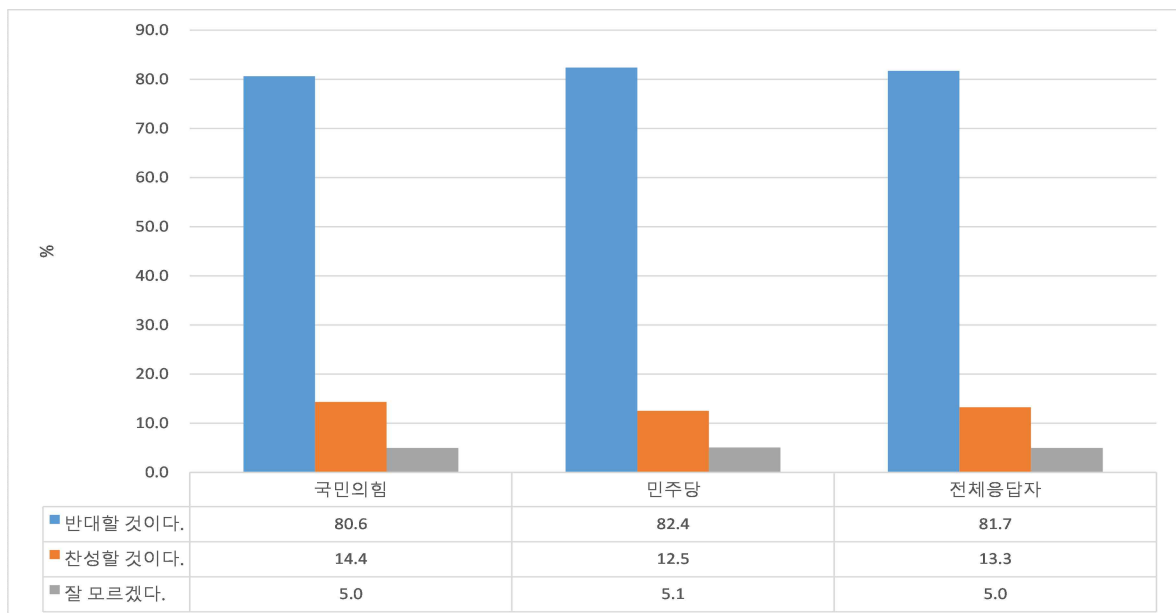
- 한국이 핵보유를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섯 가지의 위기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에 동의하는지를 측정하였음.
 - (경제제재)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한 경제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 (한미동맹파기)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미국이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 (안보위협 심화)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북한과 중국을 자극하여 한반도의 전쟁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 (핵개발비용)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핵무기 개발 비용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 (환경파괴)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환경파괴가 벌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 (평화이미지)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평화를 지향하는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가 손상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어느 정도 동의한다; 4=매우 동의한다.
- 1+2="동의하지 않음"; 3+4="동의함"

■ 핵개발의 비용에 대한 인식

- 제시된 여섯 가지 위기 가능성 모두에 대해 60% 이상의 응답자들이 동의하였음. 특히, 환경파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79.1%가 동의한 것은 한국 대중들이 핵문제에 있어서는 환경과 연관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줌.
- 한국이 핵개발을 추진해도 한미동맹 파기나 주한미군 철수 등의 위기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37.2%였는데, 이는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음. 이는 미국과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 덕분이라고 보임.
- 그러나 동시에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미국이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

<그림 II - 7> 한국 핵보유 시 미국의 태도 예측: 지지정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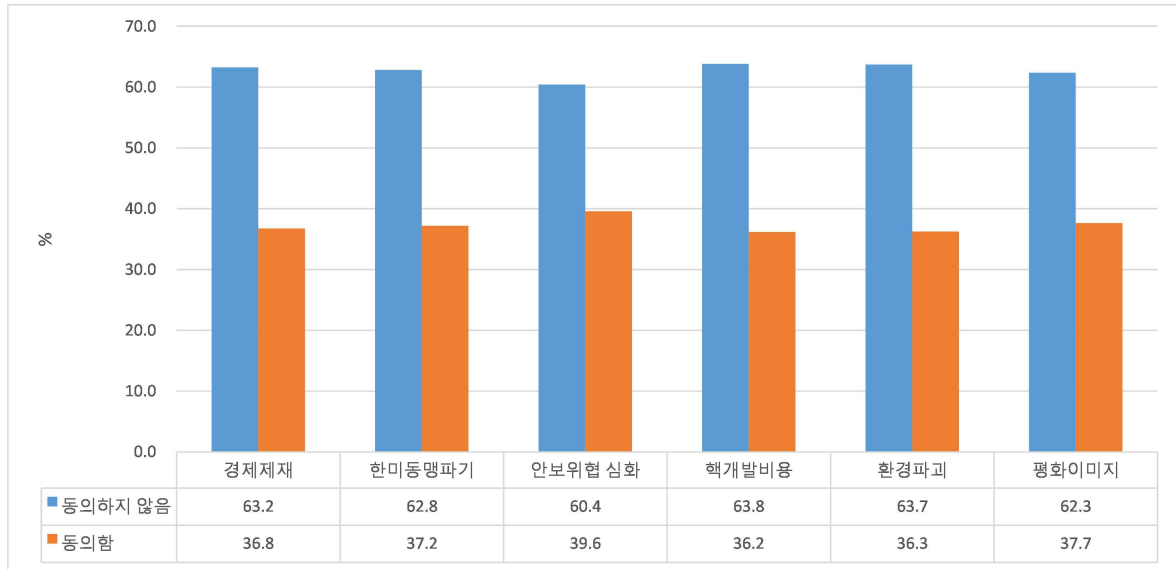


- "귀하는 한국이 핵무기를 만든다면, 미국이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적극 반대할 것이다; 2=어느 정도 반대할 것이다; 3=어느 정도 찬성할 것이다; 4=적극 찬성할 것이다; 5=잘 모르겠다.

- 1+2="반대할 것이다"; 3+4="찬성할 것이다"; 5="잘 모르겠다"
- 전체 응답자의 81.7%가 미국은 한국의 핵개발을 반대할 것이라고 응답함. 이러한 판단에는 지정당별 차이도 발견되지 않음.
- 정리하면, 한국의 대중은 한국이 실제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다면 여러 가지 심각한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하고 있음. 그리고 미국이 한국 핵개발에 부정적이라는 점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음.

6. 핵무기 보유의 조건

<그림 II - 8> 핵개발 위기 조건에서의 핵개발 동의 여부



■ 조사문항

- 핵개발에 수반될 수 있는 여섯 가지 위기 가능성 문항에 이어, 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추진해야 하는지를 질문하였음.
 - (경제제재)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한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 (한미동맹파기) "미국의 한미동맹 파기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 (안보위협 심화) "북한과 중국을 자극하여 한반도의 전쟁위험이 더 커질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 (핵개발비용) "핵무기 개발 비용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 (환경파괴)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환경파괴가 벌어질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 (평화이미지) "평화를 지향하는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가 손상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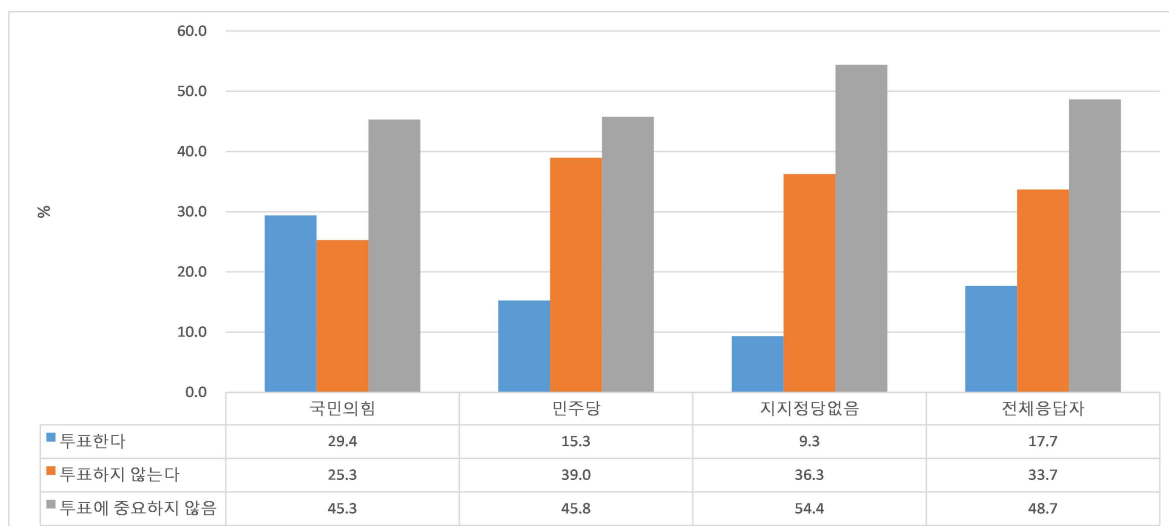
-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어느 정도 동의한다; 4=매우 동의한다.
- 1+2="동의하지 않음"; 3+4="동의함"

■ 한국인들은 핵무기를 원하는가?

- 여섯 가지의 위기 가능성을 제시하고, 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보유가 필요할지를 물었을 때 핵개발을 계속 주장하는 여론은 극적으로 줄어듦.
- 여섯 항목 모두, 핵개발에 동의하는 비율은 36%에서 37%에 그침. 이는 다른 핵보유 찬성여론이 70%를 넘는다는 다른 연구기관의 조사결과와 매우 대조적인 내용임.
- 이 조사결과의 함의는 지금까지 한국인의 핵무장 욕구에 대한 많은 여론조사와 논의들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끊임없는 북한의 핵위협과 점증하는 동북아시아의 미중갈등, 그리고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의 한미동맹 파기 위협에서 촉발된 "방기에 대한 공포(fear of abandonment)" 등을 고려하면 한국의 대중이 더 확실한 안보를 원하는 심리는 자연스러운 것임.
- 그러나 한국인들은 핵보다는 동맹과 외교적 수단 등을 통해 안보를 확고히 하는 것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줌.

7. 한국의 국내정치와 핵보유

<그림 II - 9> 핵무기 공약과 투표의향: 지지정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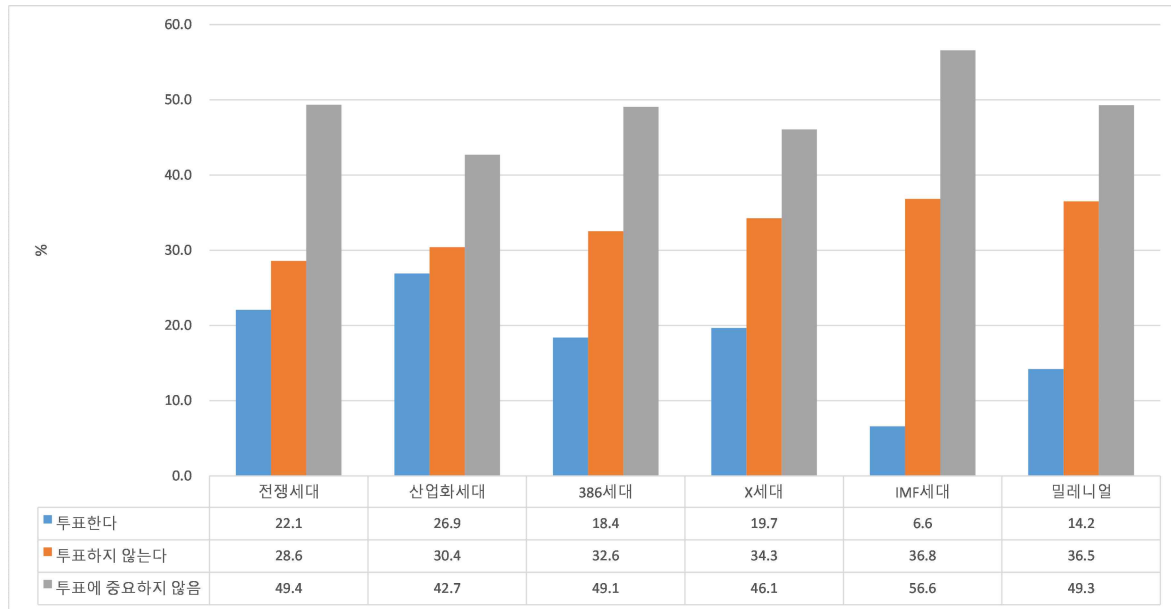
■ 조사문항

- “선거에서 후보나 정당이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다면, 귀하께서 이 후보나 정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
 - 1=투표한다; 2=투표하지 않는다; 3=핵무기 개발 공약은 나의 투표에 중요한 기준이 아니다.

■ 핵무기 개발과 유권자들의 관심

- 48.7%의 응답자들이 “핵무기 개발 공약은 나의 투표에 중요한 기준이 아니다”라고 답변함. 핵무기 개발 공약을 내세우는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답변은 17.7%에 불과한 반면, 오히려 그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답변은 33.7%에 달함.
-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독자적 핵무기 보유를 주장한 후보들에 의해 한국의 핵개발 논의가 주도되어 왔음.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핵무기 개발 공약이 선거에서 중요한 의제가 되지 못할 것임을 시사함.
-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29.4%가 핵개발 공약을 내세운 후보와 정당을 선호함. 반면 지지하지 않겠다는 답변은 25.3%에 그침. 양극화된 한국 국내정치의 구도 및 정당공천 제도 때문에 정치인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정당 내부의 지지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보수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인들의 핵개발 공약 경쟁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그림 II - 10> 핵무기 공약과 투표의향: 코호트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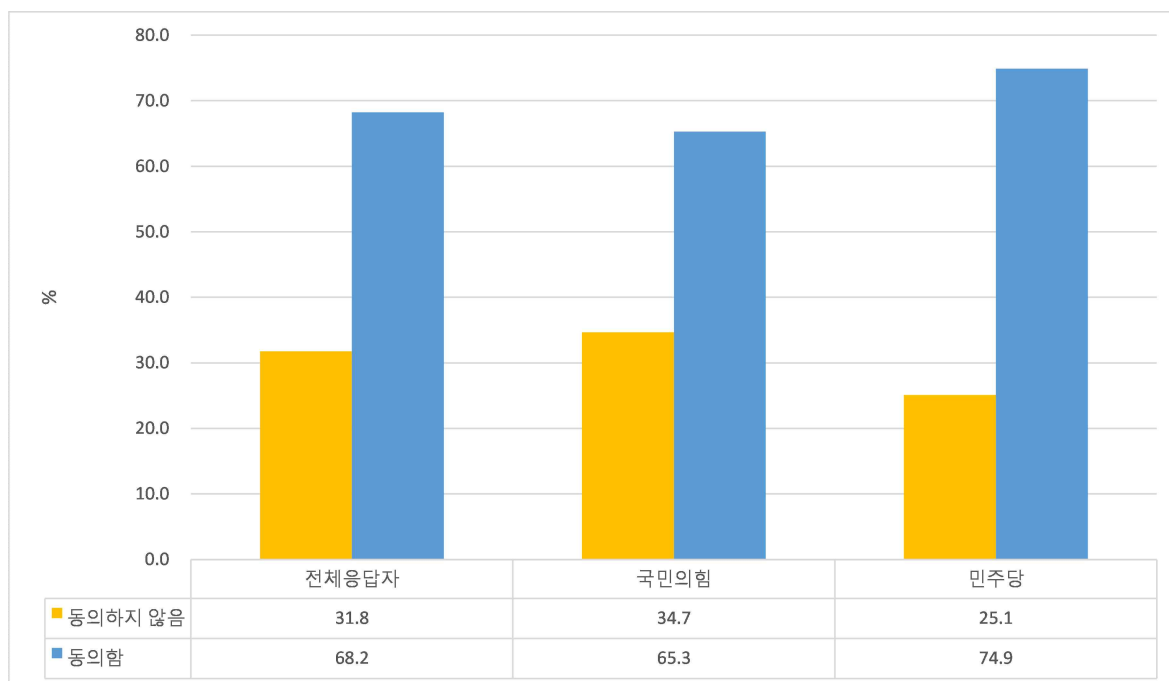


■ 세대별 태도 차이

- 젊은 세대일수록 핵무기 개발이 선거의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는 답변 비율이 높았음. IMF세대의 경우 56.6%였으며 밀레니얼세대도 49.3%로 절반에 가까웠음.
- 핵무기 개발을 약속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투표하겠다는 답이 가장 높은 것은 산업화세대로, 26.9%가 투표하겠다고 응답했음. 반면 IMF세대에서는 이 비율이 6.6%로 가장 낮아서 뚜렷한 세대별 차이가 관찰되었음.
- 젊은 세대일수록 핵무기 개발 공약을 내세운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많았고, 전쟁세대와 산업화세대에서 상대적으로 핵무기 공약 지지가 높았음.

8. 핵비확산조약 체제에 대한 태도

<그림 II - 11> NPT 체제 동의 여부: 지지정당별



■ 조사문항

- "현재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는 앞으로도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어느 정도 동의한다; 4=매우 동의한다.
 - 1+2="동의하지 않음"; 3+4="동의함"

■ 핵비확산조약 체제에 대한 높은 지지

- 핵비확산조약(NPT: Non-Proliferation Treaty) 체제에 대한 태도를 위의 문항을 통해 조사한 결과, 높은 지지를 얻고 있음이 발견되었음.
- 전체 응답자들의 68.2%가 비핵국가들의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현 체제에 동의했음.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의 동의율은 74.9%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65.3%보다 훨씬 높았음.
- 핵비확산체제와 한미동맹, 그리고 외교적 수단과 경제제재 등의 전통적 방식으로 한국의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면, 한국 국민들은 핵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결과임.

Executive Summary

K I N U
통일의식
조사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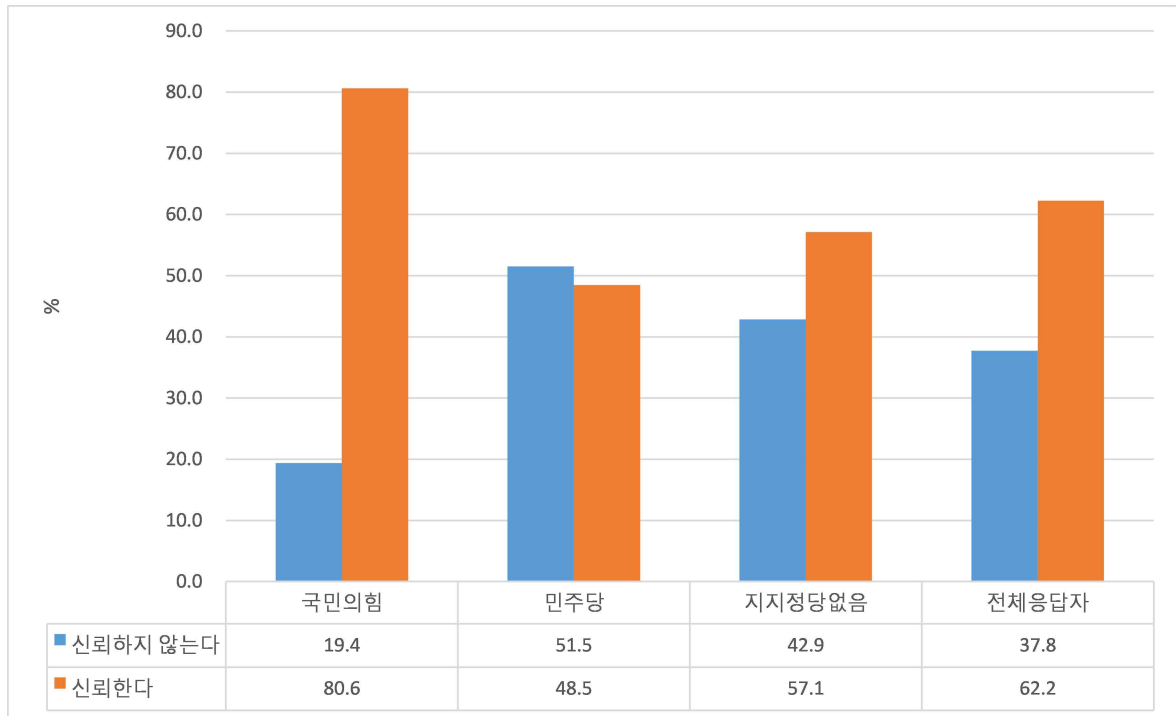
한미관계와 한국의 핵보유

이상신 (통일연구원)

III. 한미관계와 한국의 핵보유

1.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신뢰

<그림 III - 1>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신뢰: 지지정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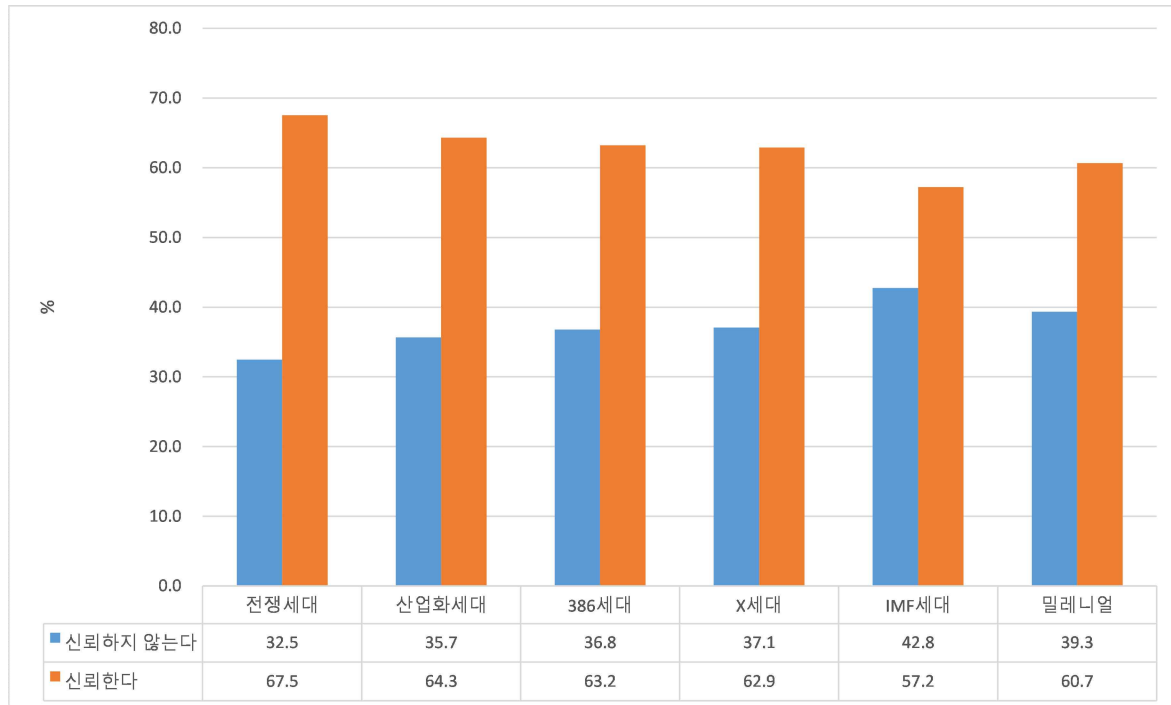
■ 조사문항

- “귀하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 1=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2=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어느 정도 신뢰한다; 4=매우 신뢰한다.
 - 1+2=“신뢰하지 않는다”; 3+4=“신뢰한다”

■ 미국에 대한 높은 신뢰 확인

- 전체 응답자 기준 62.2%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신뢰한다고 답변함.
- 그러나 지지정당별로 큰 격차가 확인되었음. 국민의힘의 경우 80.6%가 미국을 신뢰하는 반면, 민주당의 경우 48.5%에 그쳐 두 정당 지지자들 사이에 미국을 보는 시각차가 있었음.

<그림 III - 2>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신뢰: 코호트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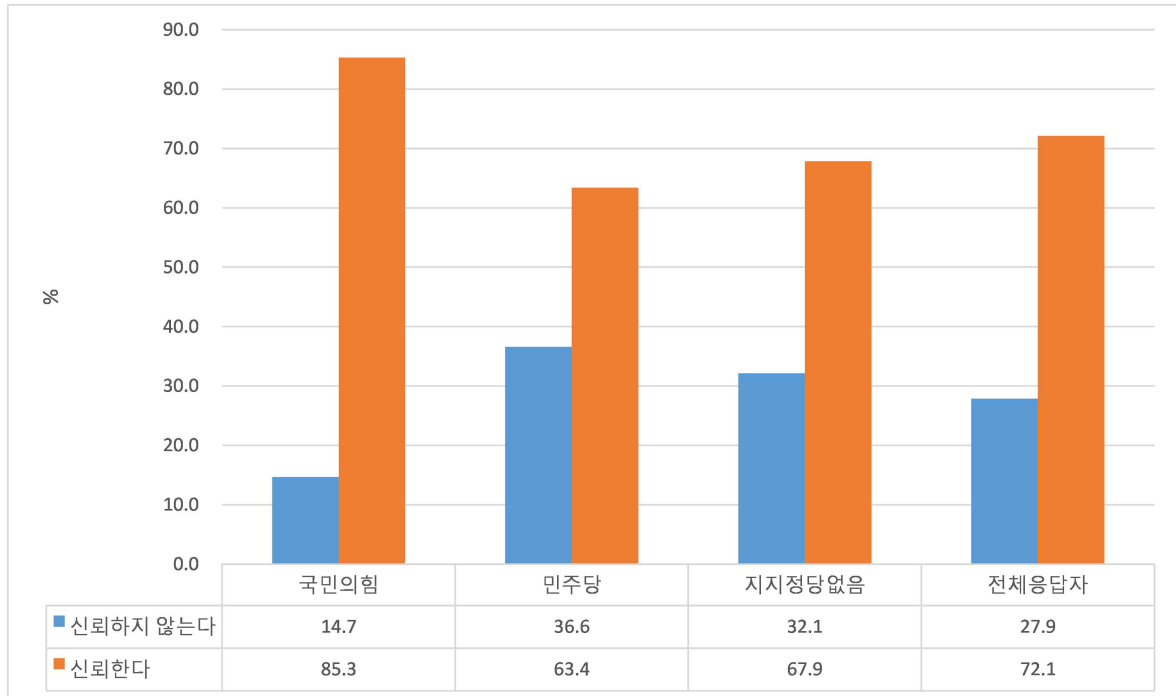
■ 386세대와 X세대에서도 미국에 대한 높은 신뢰

- 386세대와 X세대는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세대로 알려져 있으며, 동시에 반미적 태도를 갖고 있다고 평가됨.³⁾
- 그러나 386세대(63.2%)와 X세대(62.9%)는 IMF세대(57.2%)나 밀레니얼세대(60.7%)보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높음.
-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일반적인 선호도에 있어 세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그 차이가 크지 않음.

3) 김서윤, "586은 반미, 우리는 반중! MZ 세대의 중국 혐오를 키운 것은?" 『주간조선』, 2021.5.24.

2.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

<그림 III - 3>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 대한 신뢰: 지지정당별



■ 조사항항

- 귀하께서는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한다면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로 보복 공격한다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⁴⁾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 1=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2=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어느 정도 신뢰한다; 4=매우 신뢰한다.
 - 1+2="신뢰하지 않는다"; 3+4="신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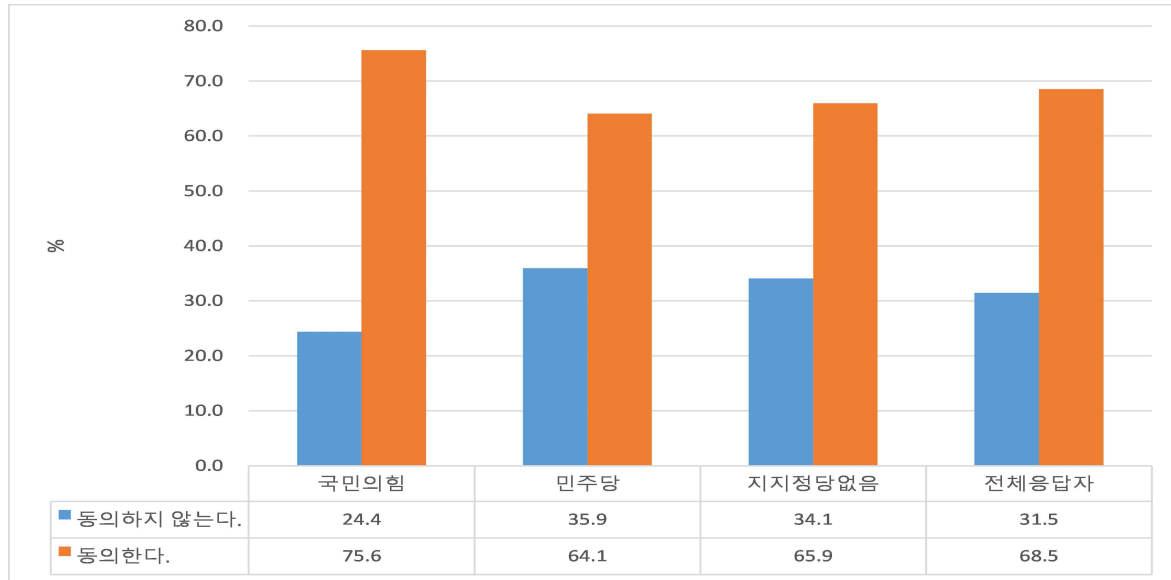
■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

- 전체 응답자의 72.1%, 국민의힘 지지자의 85.3%가 핵우산 정책을 신뢰한다고 답변함.
- 이러한 높은 신뢰는 한미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할 수 있음.

4) 이 문항 앞에 다음과 같은 설명을 삽입했다. "미국의 '핵확장억제', 혹은 '핵우산' 정책은 한국이나 일본처럼 핵무기가 없는 미국의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대신 핵보복 공격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한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3. 확장억제의 효과성 평가

<그림 III - 4> 확장억제의 효과성 평가: 지지정당별



■ 조사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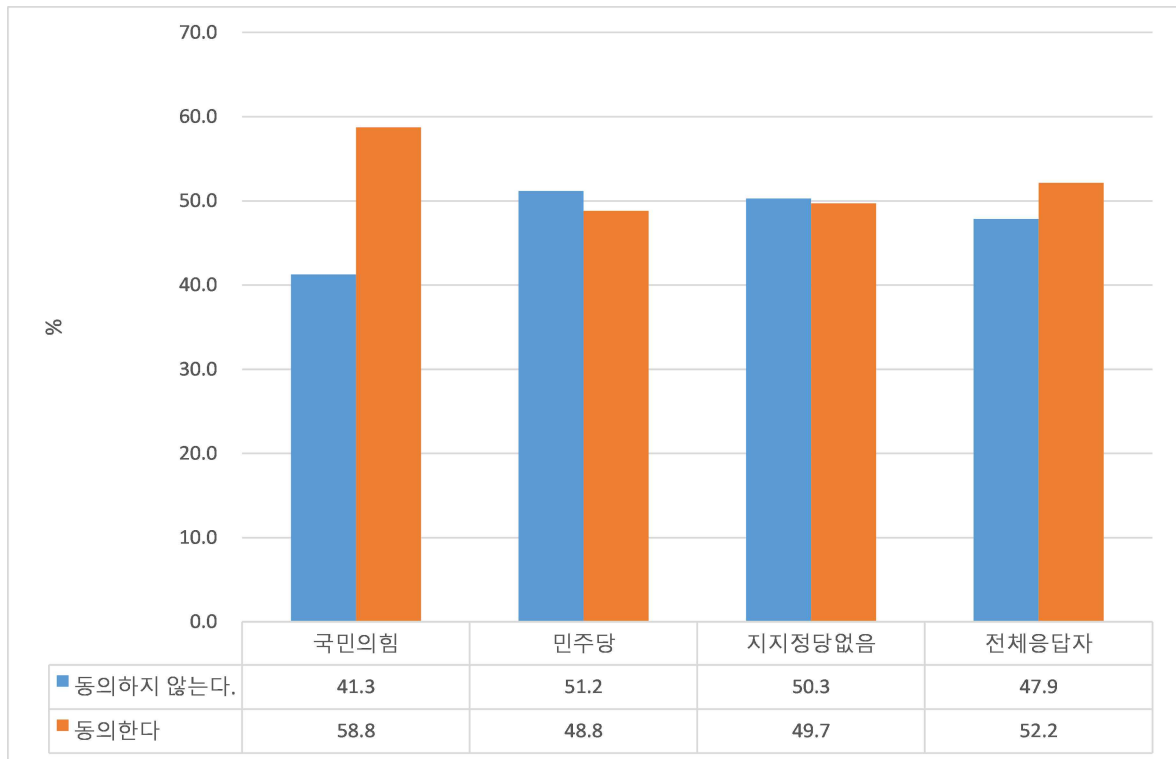
- “미국의 핵우산 정책 때문에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주장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어느 정도 동의한다; 4=매우 동의한다.
 - 1+2=“동의하지 않음”; 3+4=“동의함”

■ 핵우산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믿음

-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믿음과 실제로 이 정책이 한국을 핵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는 판단은 별개의 사안임. 따라서 KINU 통일인식조사에서는 핵우산 정책에 대한 신뢰와 그 효과성에 대한 판단을 별도의 문항으로 측정하였음.
- 전체 응답자의 68.5%, 국민의힘 지지자의 75.6%가 핵우산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응답함.
- 즉, 한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핵우산 정책을 신뢰하며, 그 정책을 통해 한국이 북핵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함.

4. 확장억제와 한국의 핵개발 필요성

<그림 III - 5> 확장억제와 한국의 핵개발 필요성: 지지정당별



■ 조사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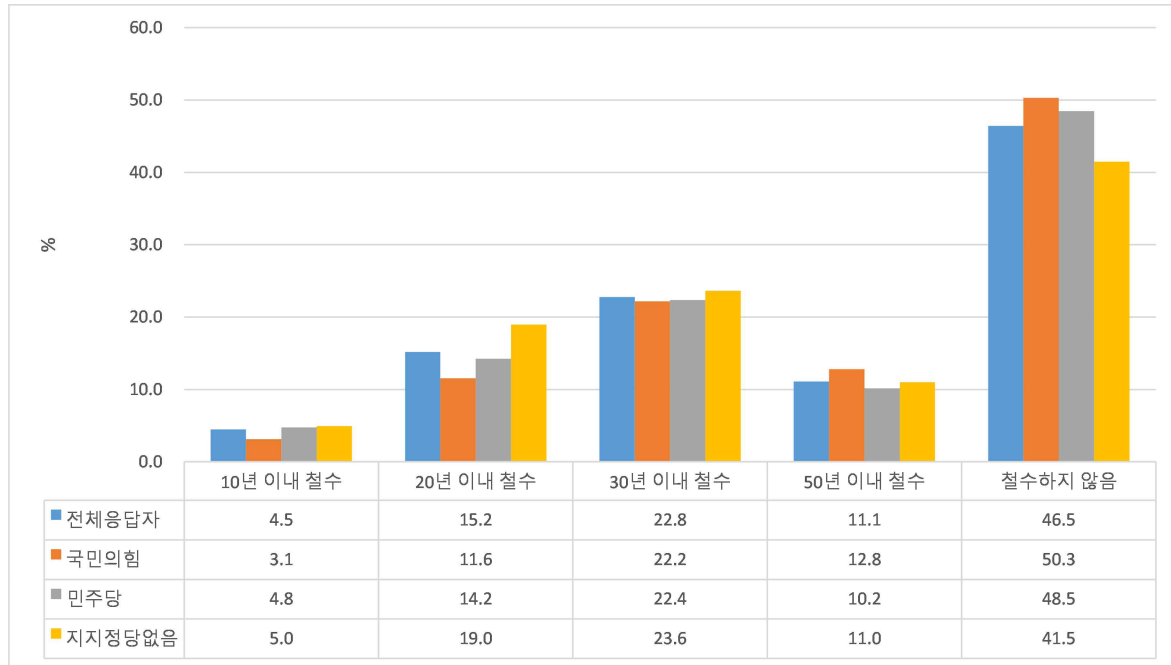
- “귀하께서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 한국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어느 정도 동의한다; 4=매우 동의한다.
 - 1+2=“동의하지 않음”; 3+4=“동의함”

■ 미국의 핵우산과 한국의 핵개발

- <그림 II - 1>에서 한국의 핵보유를 찬성하는 의견이 60.2%였음. 여기에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라는 조건이 더해졌을 때 한국이 핵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52.2%로 조사됨.
- 이는 한국의 핵보유에 대한 여론은 국제 정세 및 국내정치 구도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함.

5.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그림 III - 6>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예측: 지지정당별



■ 조사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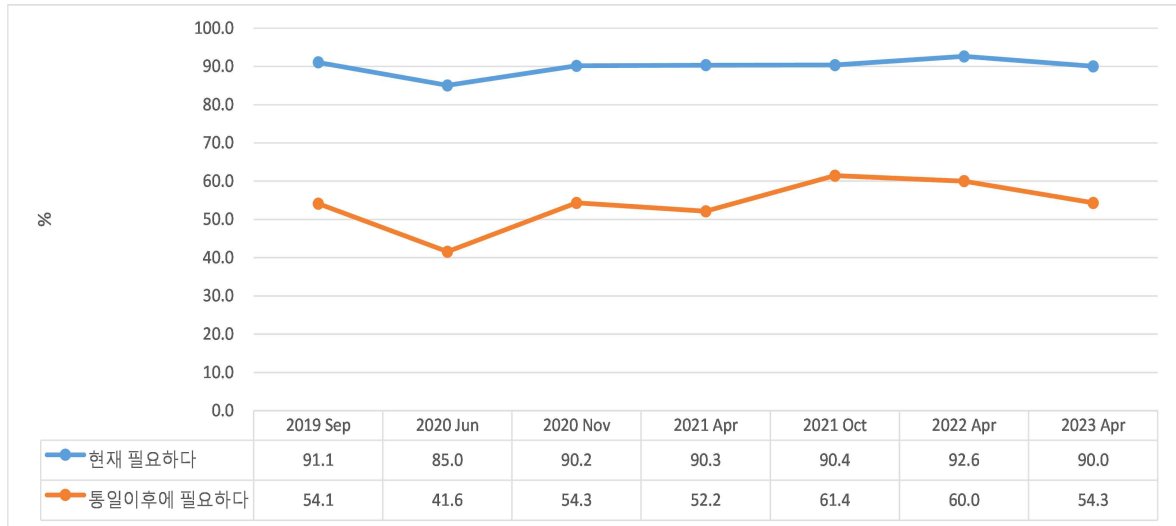
- “귀하께서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10년 안에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다; 2=20년 안에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다; 3=30년 안에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다; 4=50년 안에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다; 5=미국은 결코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 주한미군의 주둔 지속 가능성

- 남한의 핵보유 필요성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음. 즉, 주한미군이 단기간 내에 철수할 것이라는 공포 때문에 핵보유가 필요하다고 믿는 것은 아님.
- 전체 응답자의 46.5%는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음. 이는 한미동맹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확고함을 의미함. 혹은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라고 보기 때문임.
-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언급에도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음.

6. 주한미군의 필요성

<그림 III - 7> 주한미군의 필요성: 현재와 통일 이후



■ 조사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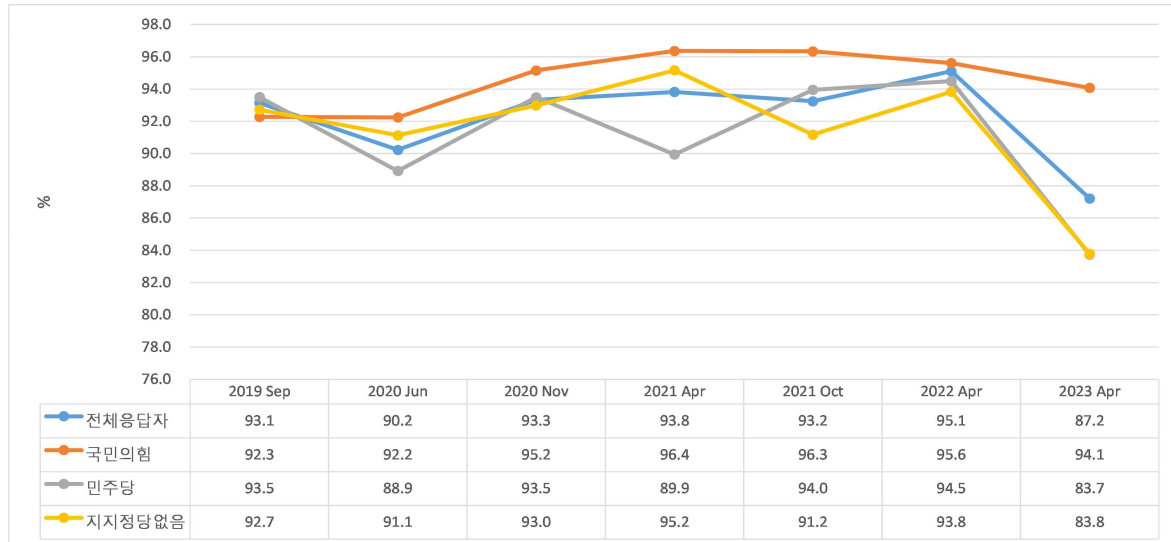
- "귀하께서는 주한미군이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주한미군이 통일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전혀 필요하지 않다; 2=별로 필요하지 않다; 3=약간 필요하다; 4=매우 필요하다.
 - 3+4="필요하다"

■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 존재

- 이 문항을 조사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주한미군이 현재 필요하다는 응답은 계속 9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이는 주한미군의 존재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전국민적 합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줌.
- 반면 통일 이후에 주한미군이 계속 한반도에 주둔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은 2022년의 60.0%에서 5.7% 하락한 54.3%를 기록함. 미중갈등의 본격화가 주한미군의 장기적 역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됨.

7. 한미동맹의 필요성

<그림 III - 8> 한미동맹의 필요성: 지지정당별



■ 조사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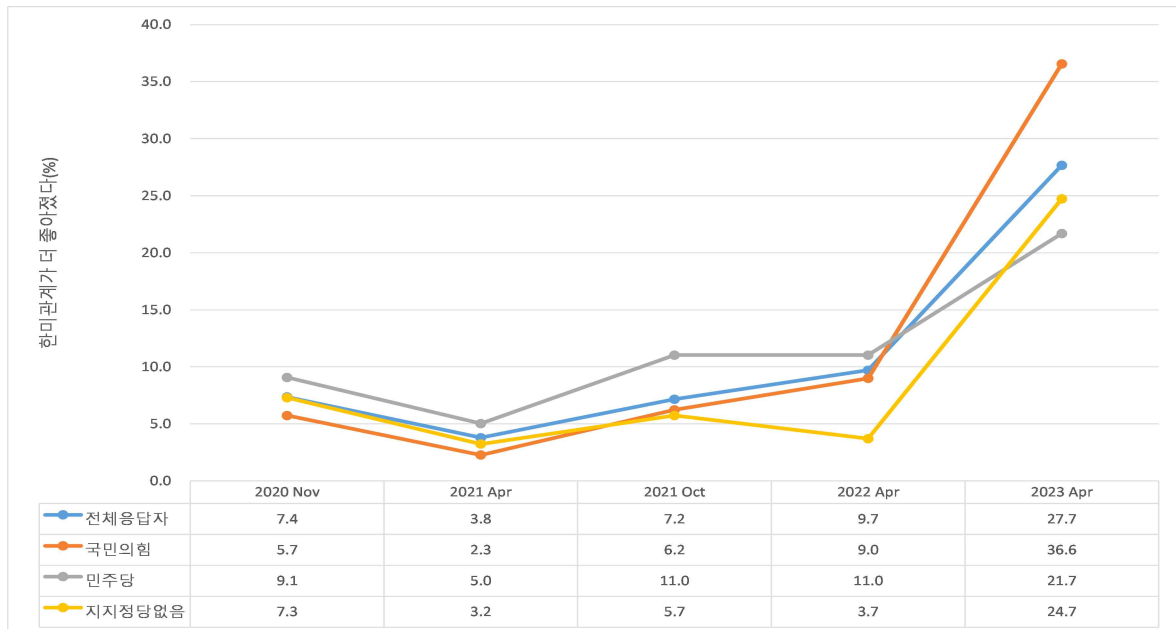
- “귀하는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전혀 필요하지 않다; 2=별로 필요하지 않다; 3=약간 필요하다; 4=매우 필요하다.
 - 3+4=“필요하다”

■ 한미동맹의 필요성에 평가 변화

-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응답은 계속 90% 이상을 유지했으며, 2022년의 경우 95.1%로 최고를 기록함. 그러나 올해는 87.2%로 하락함.
- 여전히 한국인의 절대 다수는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지만, 지난 1년간 한미관계가 악화될 특별한 사건은 없었기 때문에 흥미로운 변화임.
- 민주당 지지자들의 응답이 2022년 94.5%에서 올해는 83.7%로 하락했음. 마찬가지로 무당파 응답자들도 93.8%에서 83.8%로 하락했음.
- 이는 변화의 원인이 한미관계에 있다기보다는 한국 국내정치의 양극화에 기인했음을 시사함. 즉, 현정부의 한미관계 강화노력 때문에 오히려 정부에 비판적인 야당 지지자들이 한미동맹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낮추었을 수 있음.

8. 지난 1년간 한미관계 평가

<그림 III - 9> 한미관계 개선평가: 지지정당별



■ 조사문항

- “지난 1년 동안 한미관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1=더 좋아졌다; 2=더 나빠졌다; 3=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 1=“한미관계가 더 좋아졌다.”

■ 한미관계의 개선

- 전체 응답자 중 지난 1년간 한미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27.7%로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반면 더 나빠졌다는 응답은 10.4%로 낮았고,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은 61.9%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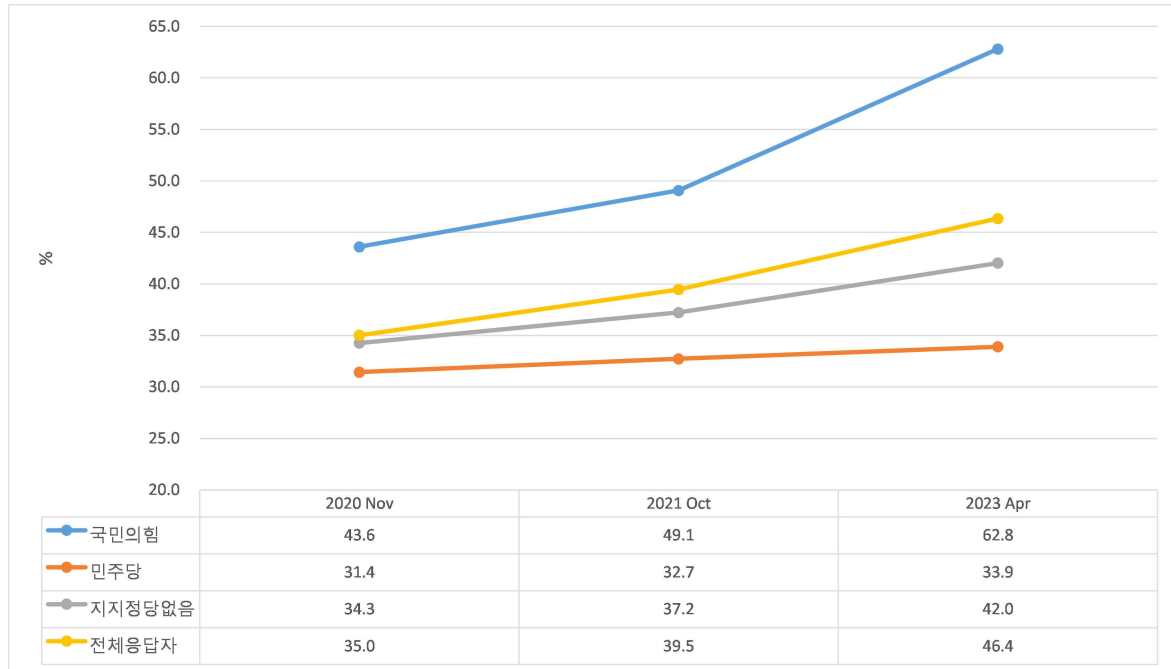
<표 III - 1> 한미관계 평가(전체 응답자 기준)

(단위: %)

한미관계 평가	2020 Nov	2021 Apr	2021 Oct	2022 Apr	2023 Apr
더 좋아졌다	7.4	3.8	7.2	9.7	27.7
더 나빠졌다	38.0	25.9	14.2	10.7	10.4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54.6	70.3	78.6	79.6	61.9

9. 미국의 한국 국익 배려

<그림 III - 10> 미국의 한국 국익 배려: 지지정당별



■ 조사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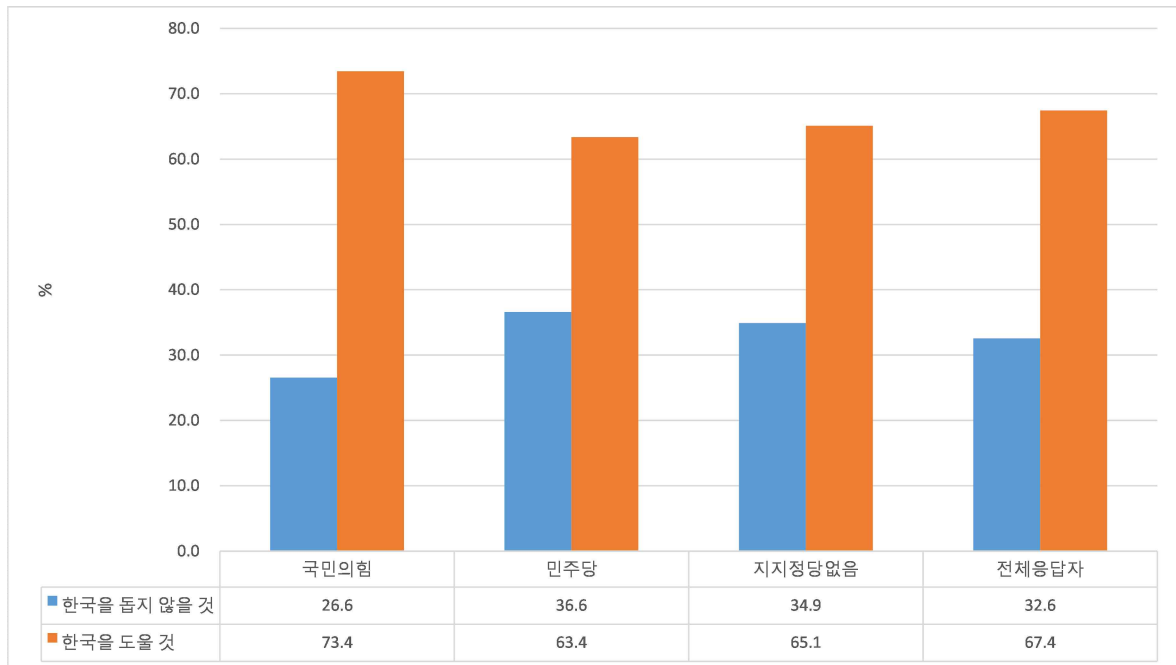
- "귀하는 미국이 국제 정책을 결정할 때 한국과 같은 국가의 이익을 어느 정도 고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매우 많이 고려한다; 2=상당한 만큼 고려한다; 3=별로 고려하지 않는다; 4=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 1+2="미국은 한국의 국익을 고려한다."

■ 개선된 미국 이미지, 그리고 한국정치 양극화의 영향

- 2020년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35%가 미국이 한국의 국가 이익을 고려한다고 답했는데, 2023년에는 46.4%로 상승함. 상승폭은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에서 컸음(62.8%). 반면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2020년 이후 큰 변화 없음.
- 전체적으로 미국의 이미지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양극화되고 있는 국내정치가 여기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

10. 한중 분쟁 시 미국의 지원 가능성

<그림 III - 11> 한중 분쟁 시 미국의 지원 가능성: 지지정당별



■ 조사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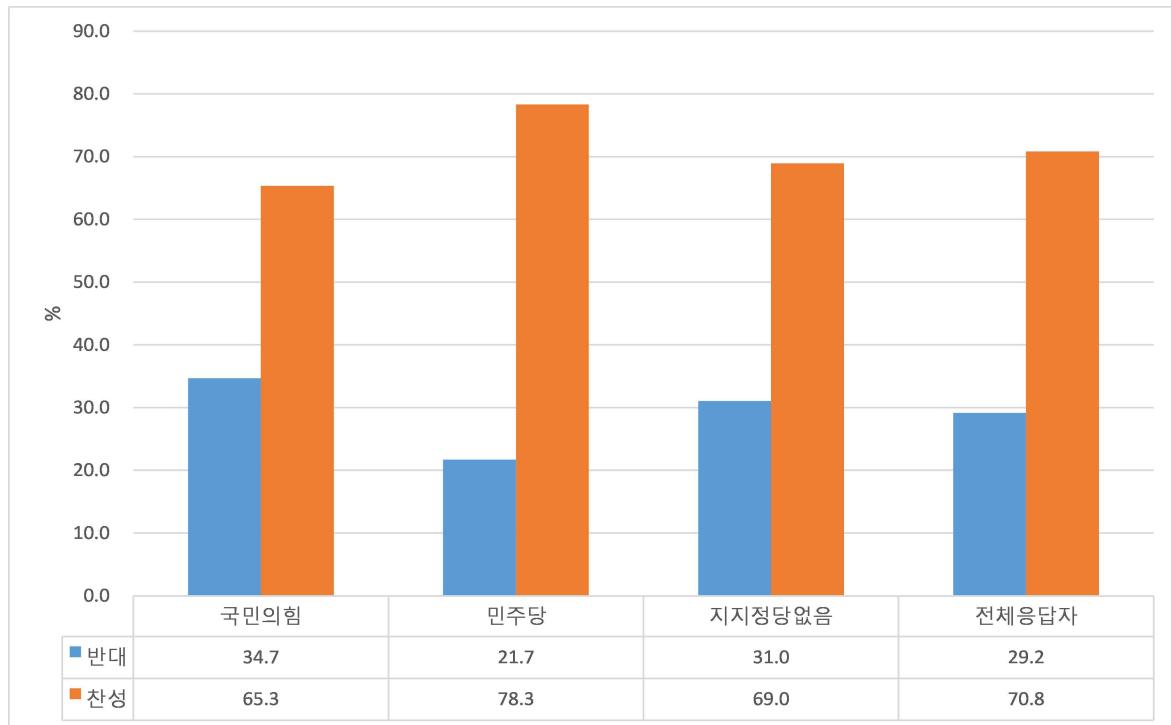
- "중국과 한국 사이에 군사적 분쟁이 벌어진다면, 귀하는 미국이 중국에 맞서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어느 정도 동의한다; 4=매우 동의한다.
 - 1+2="한국을 돕지 않을 것"; 3+4="한국을 도울 것"

■ 한미동맹의 대중분쟁 시 역할 예측

- 한중 간의 군사적 분쟁이라는 가설적 상황을 제시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였음.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는 높지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신뢰가 아니라 구체적 위기 시나리오 속에서 한미동맹이 작동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다른 문제임.
- 전체 응답자의 67.4%,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의 73.4%가 한중 분쟁 상황에서 미국이 도울 것이라고 예측함.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또한 63.4%가 한미동맹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남.

11.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한 의견

<그림 III - 12>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한 의견: 지지정당별



■ 조사문항

- “귀하께서는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⁵⁾을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국군으로 가져오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1=매우 반대한다; 2=어느 정도 반대한다; 3=어느 정도 찬성한다; 4=매우 찬성한다.
 - 1+2="반대"; 3+4 "찬성"

■ 전시작전권 전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

-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 미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전체 응답자의 70.8%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등 국민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국민의힘 65.3%, 민주당 78.3%로 지지정당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한 태도에는 차이가 존재하나, 보수정당 지지자의 경우에도 3분의 2 가까운 비율로 전시작전권 이양을 찬성하고 있음.

5) 이 문항 앞에 다음과 같은 설명을 삽입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이 났을 때 군대를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현재 미군 장성이 최고사령관인 한미연합사령부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미동맹의 필요성이나 미국에 대한 선호와는 별개로, 주권의 중요한 부분인 전시작전권은 온전히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여론 합의가 존재함.
- 그러나 전시작전권의 개념과 한미연합사령부의 역할 등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정보 수준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한미관계 및 동북아 정세의 변화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여론도 충분히 변화 가능성이 있을 것임.

Executive Summary

K I N U
통일의식
조사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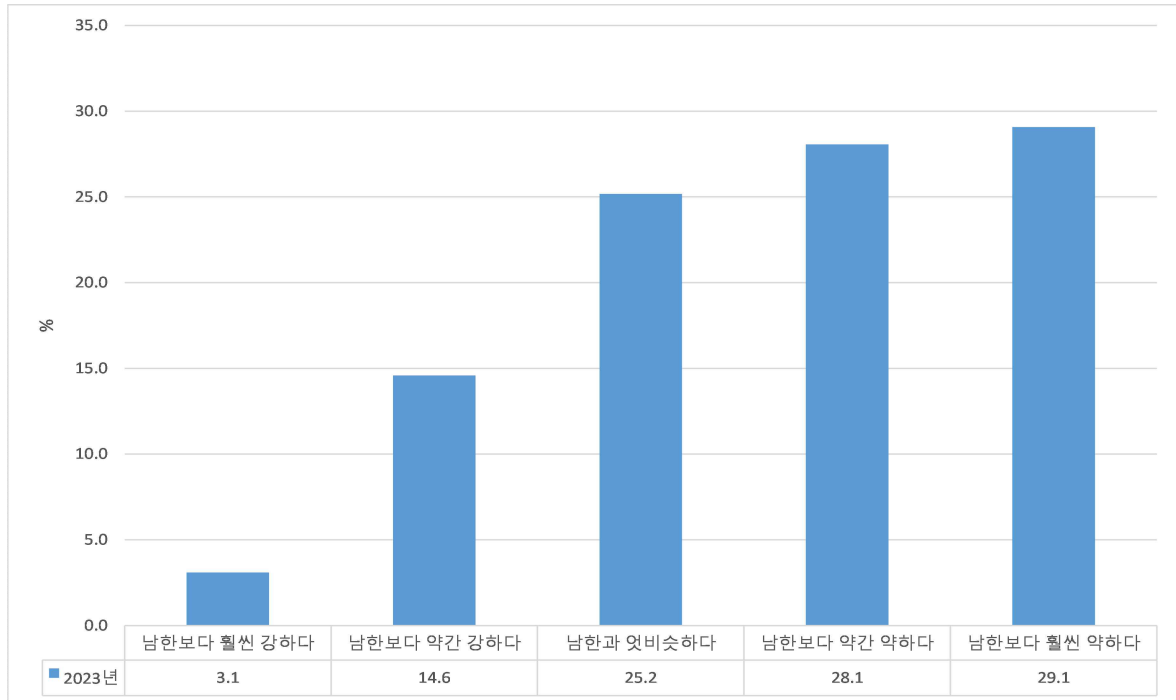
북한의 핵위협과 한국의 핵보유

윤광일 (숙명여자대학교)

IV. 북한의 핵위협과 한국의 핵보유

1. 남북 재래식 군사력 비교

<그림 IV - 1> 남북 재래식 군사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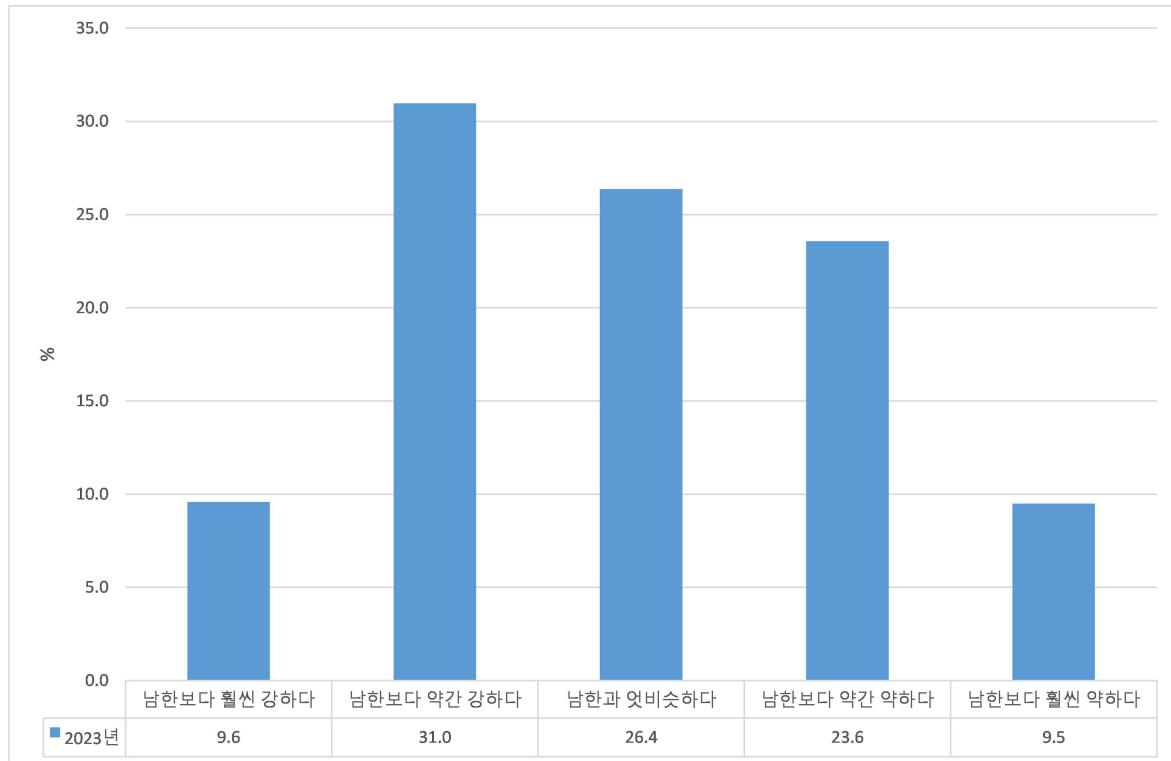
■ 조사문항

- “만약 북한에 핵무기가 없다면,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보다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북한의 군사력은 남한보다 훨씬 강하다; 2=북한의 군사력은 남한보다 약간 강하다; 3=북한의 군사력은 남한과 엇비슷하다; 4=북한의 군사력은 남한보다 약간 약하다; 5=북한의 군사력은 남한보다 훨씬 약하다.

■ 핵무기 제외 시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

- 재래식 군사력을 기준으로 하면, 북한이 남한보다 약간 약하거나(28.1%) 훨씬 약하다(29.1%)고 생각하는 비율이 과반(57.2%)으로 나타남.
 - 북한의 군사력 판단에 있어서 핵무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을 시사하는 결과로 보임.

<그림 IV - 2> 남북 군사력 비교



■ 조사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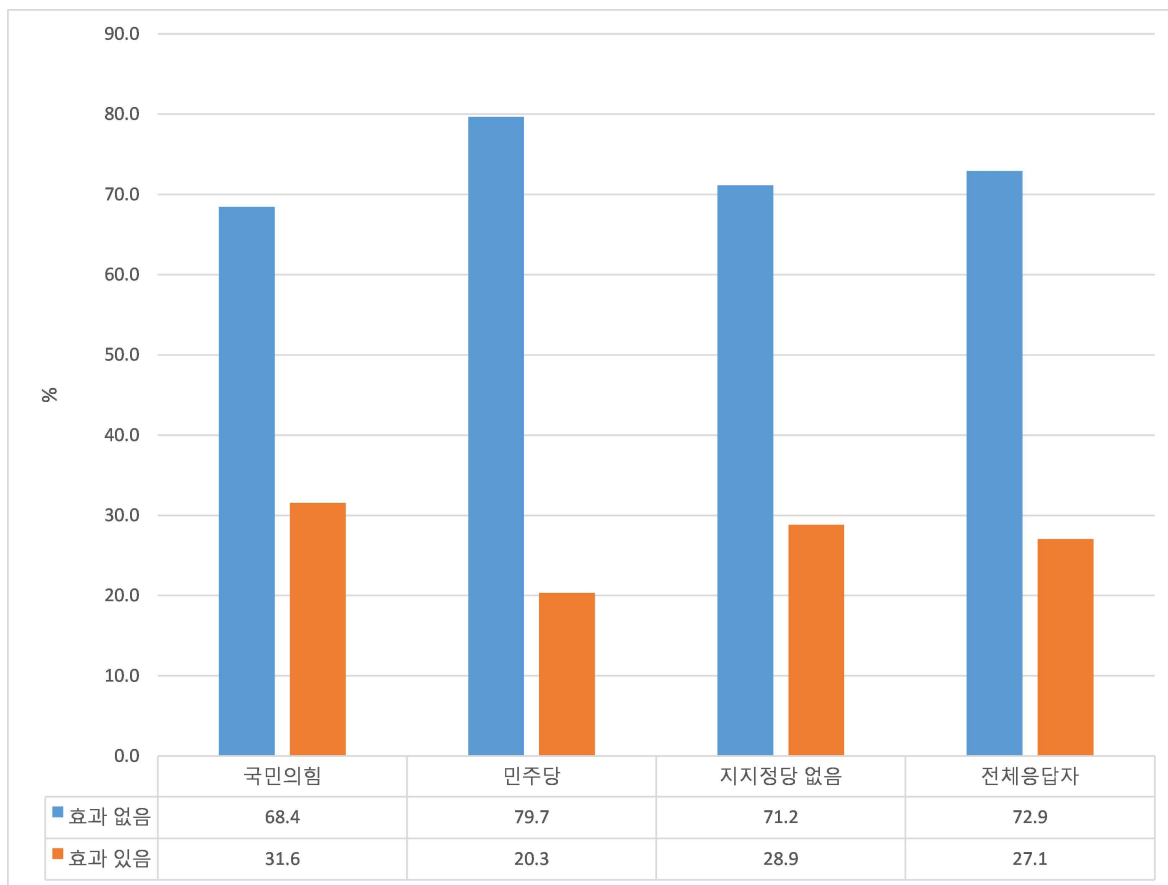
- “귀하께서는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보다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북한의 군사력은 남한보다 훨씬 강하다; 2=북한의 군사력은 남한보다 약간 강하다; 3=북한의 군사력은 남한과 엇비슷하다; 4=북한의 군사력은 남한보다 약간 약하다; 5=북한의 군사력은 남한보다 훨씬 약하다.

■ 핵무기를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는 경우,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의 군사력과 대등하거나 약간 열세에 있는 것으로 인식

- 북한이 남한보다 약간 강하거나(31.0%) 훨씬 강하다(9.6%)고 생각하는 비율(40.6%)과 남한보다 약간 약하거나(23.6%) 훨씬 약하다(9.5%)고 생각하는 비율(33.1%)에 7.5%의 차이가 있음.
 - 앞선 결과(<그림 IV - 1>)와 비교하여 북한 군사력 평가에서 핵무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결과로 보임.
 - 지지정당별로 나누어 비교해도 큰 차이 없음.

2. 대북 경제제재와 북한 비핵화

<그림 IV - 3>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성: 지지정당별



■ 조사문항

-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전혀 효과가 없다; 2=별로 효과가 없다; 3=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4=매우 효과가 있다.
 - 1+2=“효과 없음”; 3+4=“효과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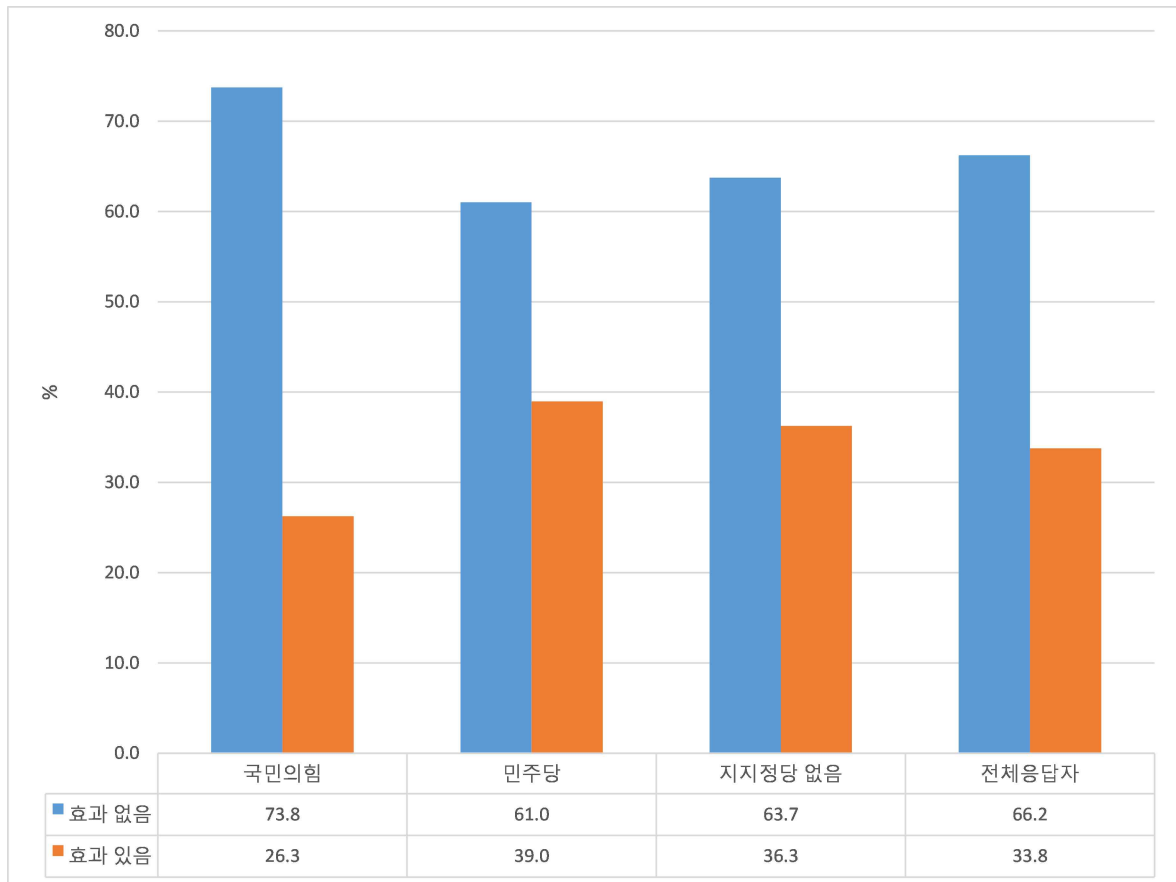
■ 북한의 비핵화 유도에 있어서 경제제재가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인식

-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지지정당이 없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97.8%)인 가운데, 세 범주 집단 모두 경제제재의 비핵화 유도 효과에 대해 70% 내외로 회의적임.

- 지지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자(79.7%)가 국민의힘 지지자(68.4%)나 지지정당이 없는 응답자(71.2%)보다 약 10%p 안팎으로 더 높게 경제제재의 비핵화 유도 효과에 대해 회의적임.
- 국민의힘과 지지정당이 없는 응답자가 30% 내외의 비슷한 수준에서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3. 남북대화와 북한 비핵화

<그림 IV - 4> 남북대화의 효과성: 지지정당별



■ 조사문항

- “남북대화와 남북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전혀 효과가 없다; 2=별로 효과가 없다; 3=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4=매우 효과가 있다.
 - 1+2=“효과 없음”; 3+4=“효과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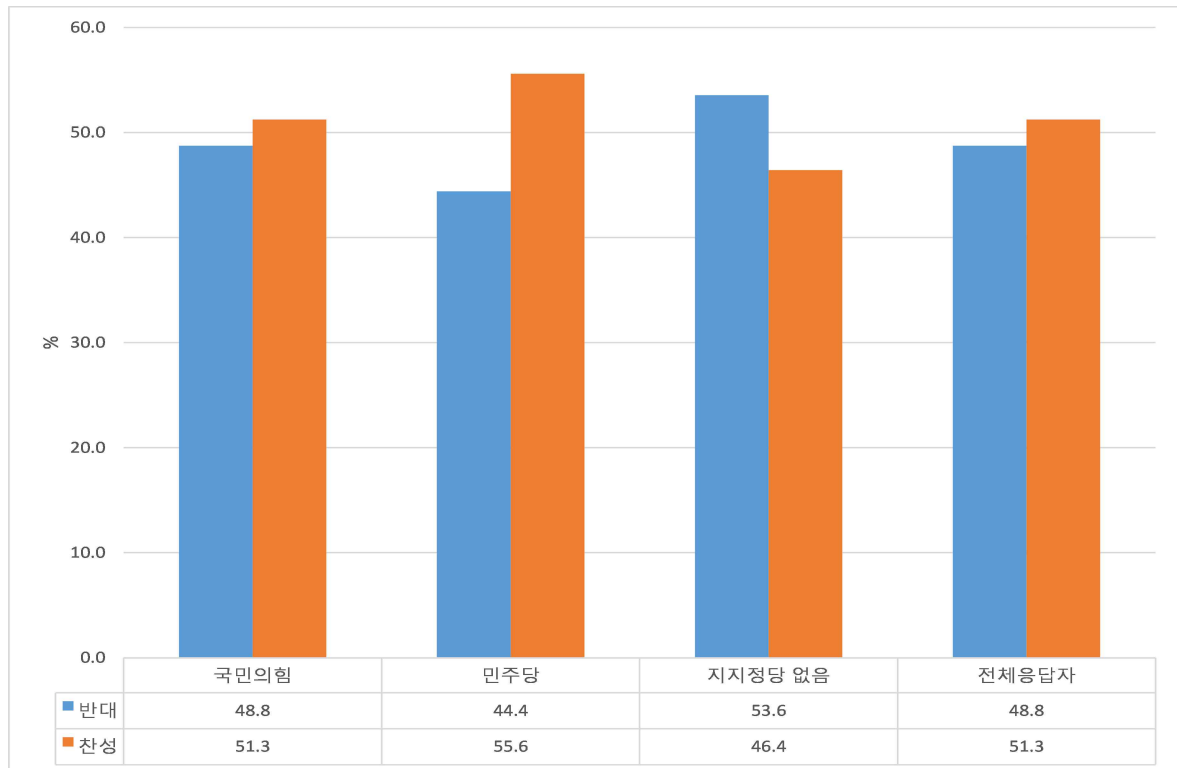
■ 북한의 비핵화 유도에 있어서 남북대화가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인식

-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지지정당이 없는 응답자 모두 남북대화의 비핵화 유도 효과에 대해 대체로 회의적임.

- 지지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지지자(73.8%)가 민주당 지지자(61.0%)나 지지정당이 없는 응답자(63.7%)보다 약 12%p 안팎으로 더 높게 남북대화의 비핵화 유도 효과에 대해 회의적임.
- 경제제재 효과와 달리, 민주당과 지지정당이 없는 응답자가 30% 후반대의 비슷한 수준에서 남북대화 효과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4. 북한신문과 방송의 시청 허용

<그림 IV - 5> 북한신문과 방송의 국내 허용에 대한 여론: 지지정당별



■ 조사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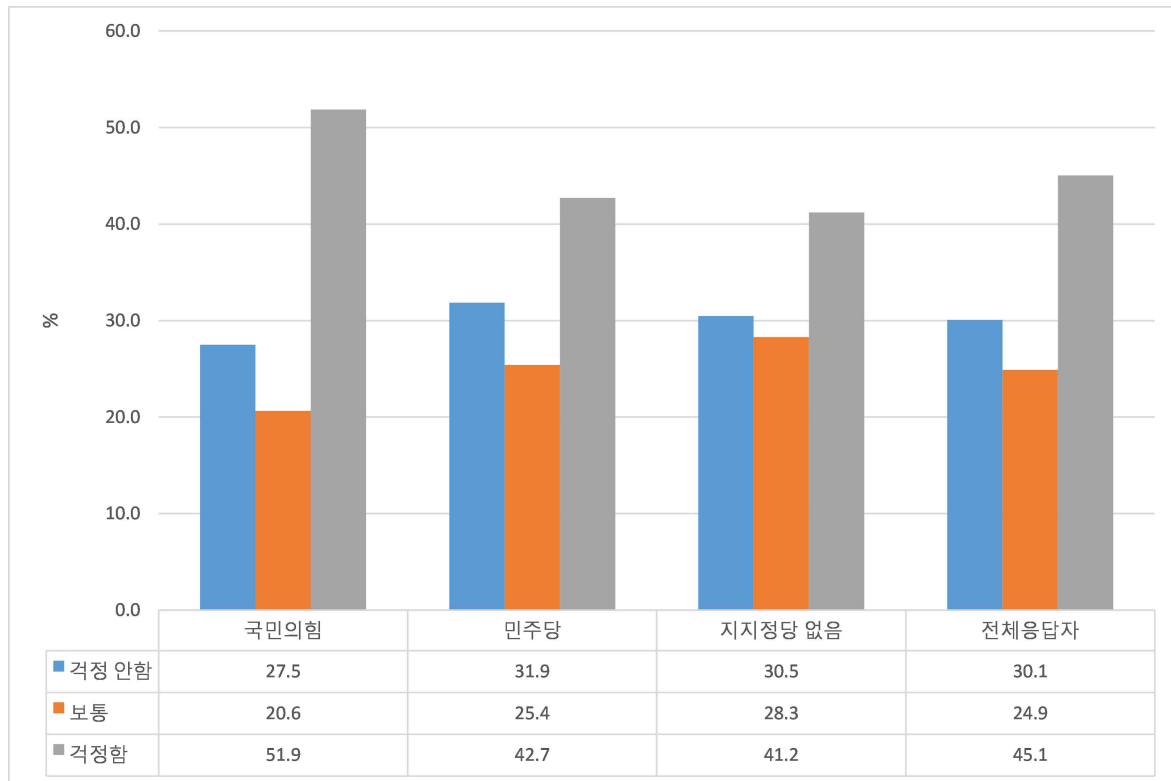
- “최근 북한 신문이나 방송을 한국에서 볼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북한방송 허용에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 1=매우 반대; 2=어느 정도 반대; 3=어느 정도 찬성; 4=매우 찬성
 - 1+2=“반대”; 3+4=“찬성”

■ 북한방송 공개 선호에 대해서는 대등한 비율로 찬반으로 갈림

- 지지정당이 없는 응답자를 제외하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자 모두 북한언론 공개에 찬성하는 비율이 과반으로 나타나나 반대 비율과 거의 대등함.
 - 지지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자(55.6%)가 국민의힘 지지자(51.3%)보다 공개에 대한 찬성 비율이 약간 높은 가운데, 지지정당이 없는 응답자(46.4%)는 찬성보다 반대비율이 약간 높았음.

5. 북핵위협에 대한 우려

<그림 IV - 6> 북핵위협에 대한 우려: 지지정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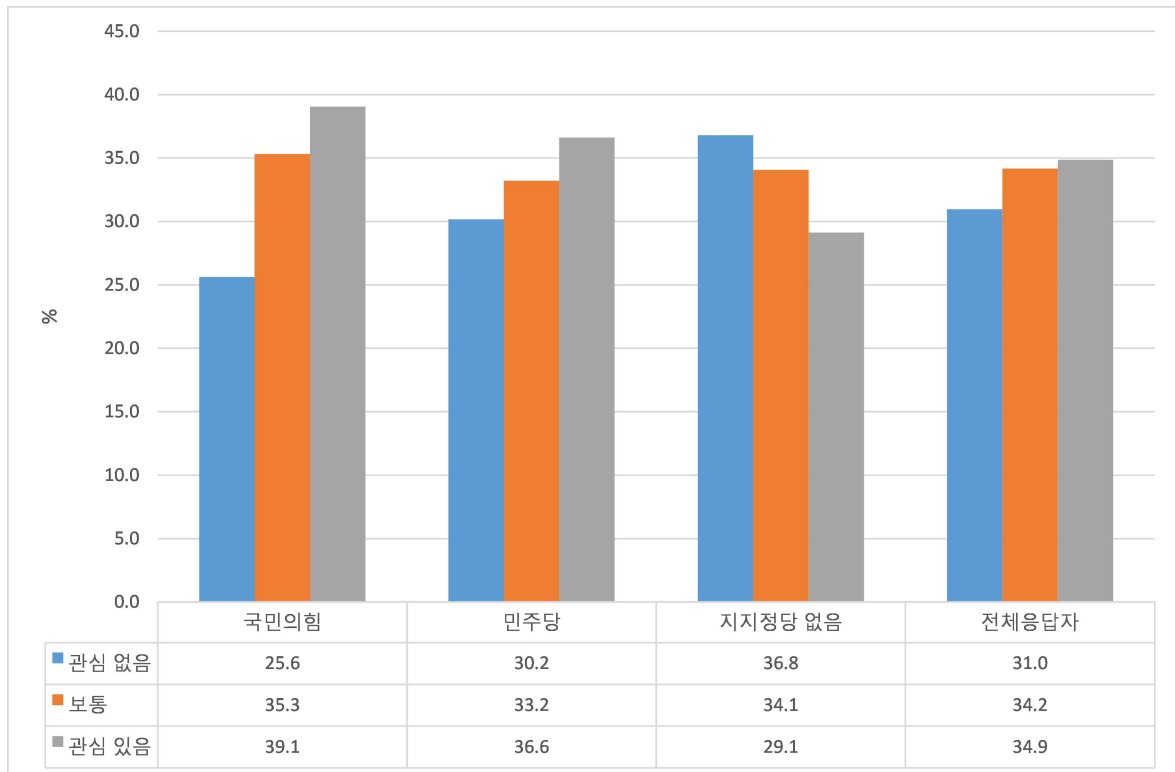


■ 조사문항

- “귀하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어느 정도 걱정하십니까?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2=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3=보통이다; 4=다소 걱정한다; 5=매우 걱정한다.
 - 1+2=“걱정 안함”; 4+5=“걱정함”
- 핵위협에 대해 걱정하는 응답자 비율이 과반에 육박함.
 -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응답자가 과반(51.9%)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42.7%)와 지지정당이 없는 응답자(41.2%)가 대등한 수준에서 핵위협에 대해 걱정하는 비율이 나타남.

6. 북핵위협에 대한 관심

<그림 IV - 7> 북핵위협에 대한 관심: 지지정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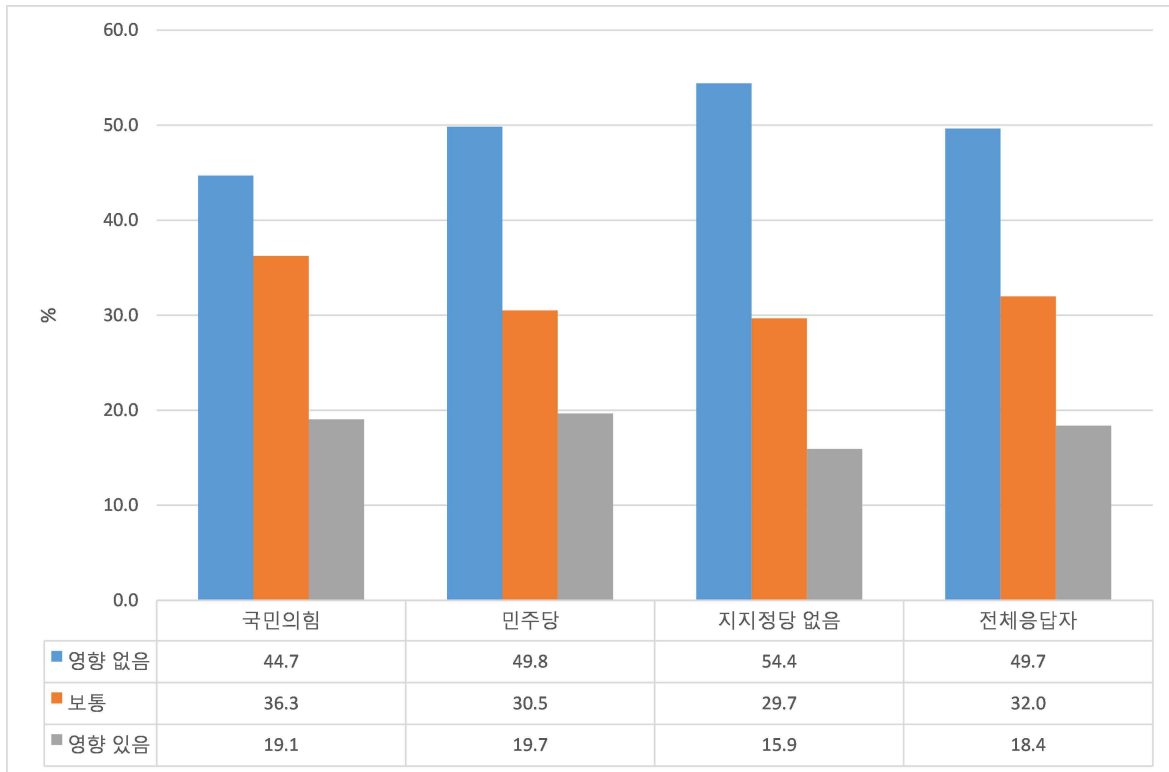
■ 조사문항

-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귀하는 어느 정도 관심(이야기, 기사나 책읽기, TV 시청하기 등)이 있으십니까?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전혀 관심이 없다; 2=별로 관심이 없다; 3=보통이다; 4=다소 관심이 있다; 5=매우 관심이 있다.
 - 1+2=“관심 없음”; 3=“보통”; 4+5=“관심 있음”

■ 북핵위협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

-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응답자(39.1%)와 민주당 지지자(36.6%)가 비슷한 수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지정당이 없는 응답자(29.1%)는 다소 낮은 수준의 관심을 보임.
 - 북한의 잦은 미사일 도발과 핵위협에 대한 피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그림 IV - 8> 핵위협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지지정당별



■ 조사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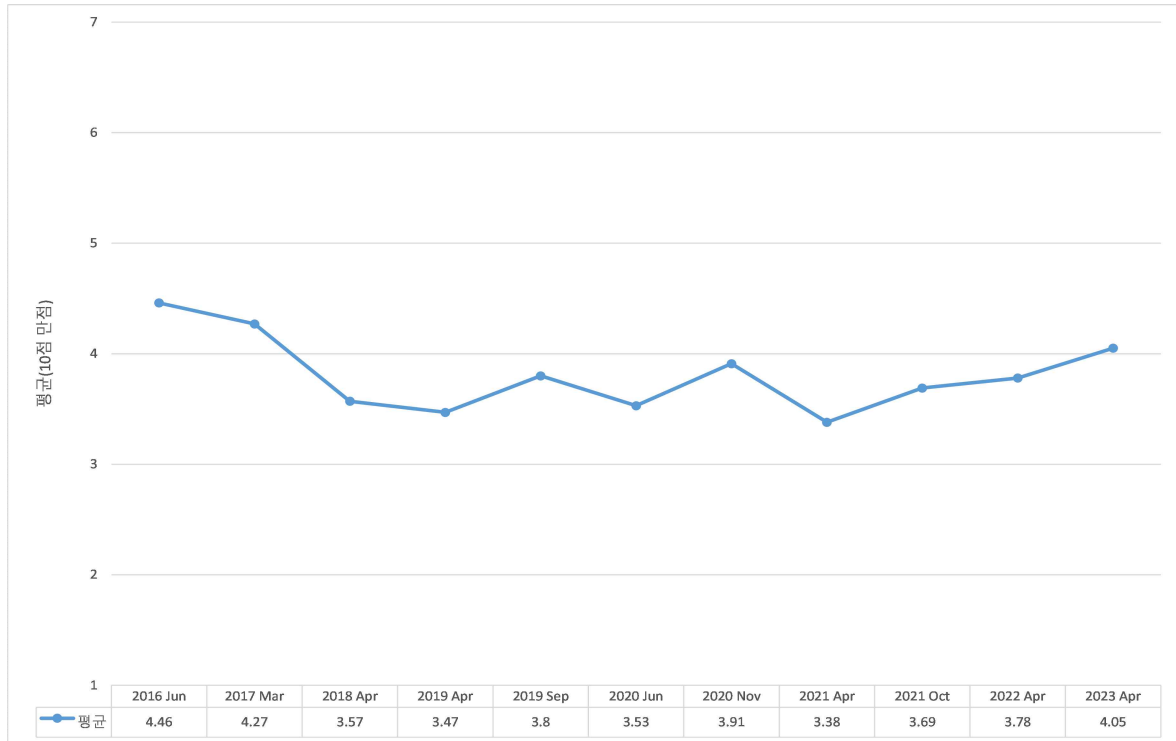
- “북한의 핵위협은 귀하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까?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보통이다; 4=다소 영향을 미친다; 5=매우 영향을 미친다.
 - 1+2=“영향 없음”; 3=“보통”; 4+5=“영향 있음”

■ 핵위협은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

- 국민연합 지지자(19.1%), 민주당 지지자(19.7%), 지지정당이 없는 응답자(15.9%) 모두 비슷하게 낮은 수준에서 북한의 핵위협이 삶에 영향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앞서 관심도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잦은 미사일 도발과 핵위협에 대한 피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핵위협에 대한 체감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7. 북한과 핵전쟁 발발 가능성

<그림 IV - 9> 북한과 핵전쟁 발발 가능성(2016~2023)



■ 조사문항

- “10년 내 북한과의 핵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0=가능성이 전혀 없다; 5=보통; 10=가능성이 매우 높다.
 - 그래프에 표기된 값은 매조사의 평균값임.

■ 핵전쟁 발생 가능성 예측이 상승하는 추세

- 문재인 정권 시기 평균 3점대를 유지하다가 정권교체 이후 첫 조사인 올해 4.05를 기록함.
 - 가장 높았던 조사 첫해인 2016년(4.46)과 2017년(4.27)보다 평균이 낮았지만 2021년 10월 조사 이후 상승하는 추세임.
 - 보통(5점)보다는 낮은 평균을 유지하고 있지만 핵전쟁 발발 가능성 예측이 상승하는 이유와 관리 방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처방이 필요해 보임.

Executive Summary

K I N U
통일의식
조사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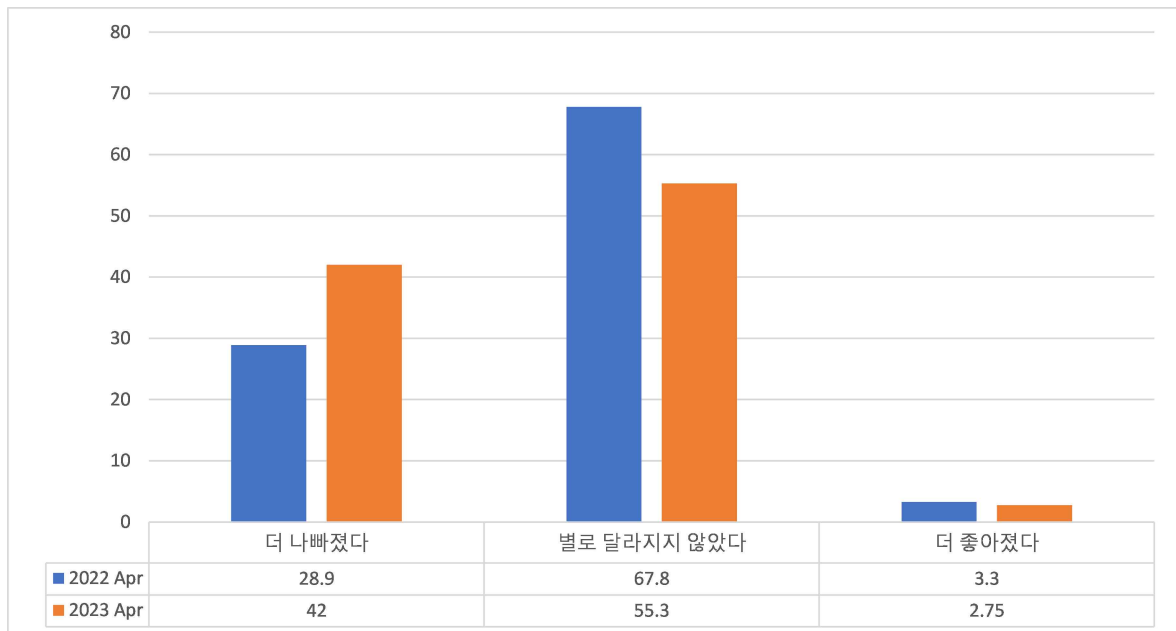
동북아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여론

민태은 (통일연구원)

V. 동북아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여론

1. 한중관계 평가

<그림 V - 1> 한중관계 평가



■ 조사문항

- “지난 1년 동안 한중관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1=더 좋아졌다; 2=더 나빠졌다; 3=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 한중관계에 대한 부정적 평가 큰 폭으로 증가

- 이번 조사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다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일 년 사이 한중관계가 더 나빠졌다고 평가한 응답자가 약 13% 증가함.
- 이러한 결과는 최근 미국이 중국 견제를 목표로 인태전략을 추진하며 한미관계는 더욱 밀착된 반면 중국과의 거리는 멀어진 변화를 국민 인식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이러한 해석은 한중관계가 나빠졌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는 문항에 중국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년 조사 대비 크게 줄어든 반면 한국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증가한 사실에 의해 뒷받침됨(<표 V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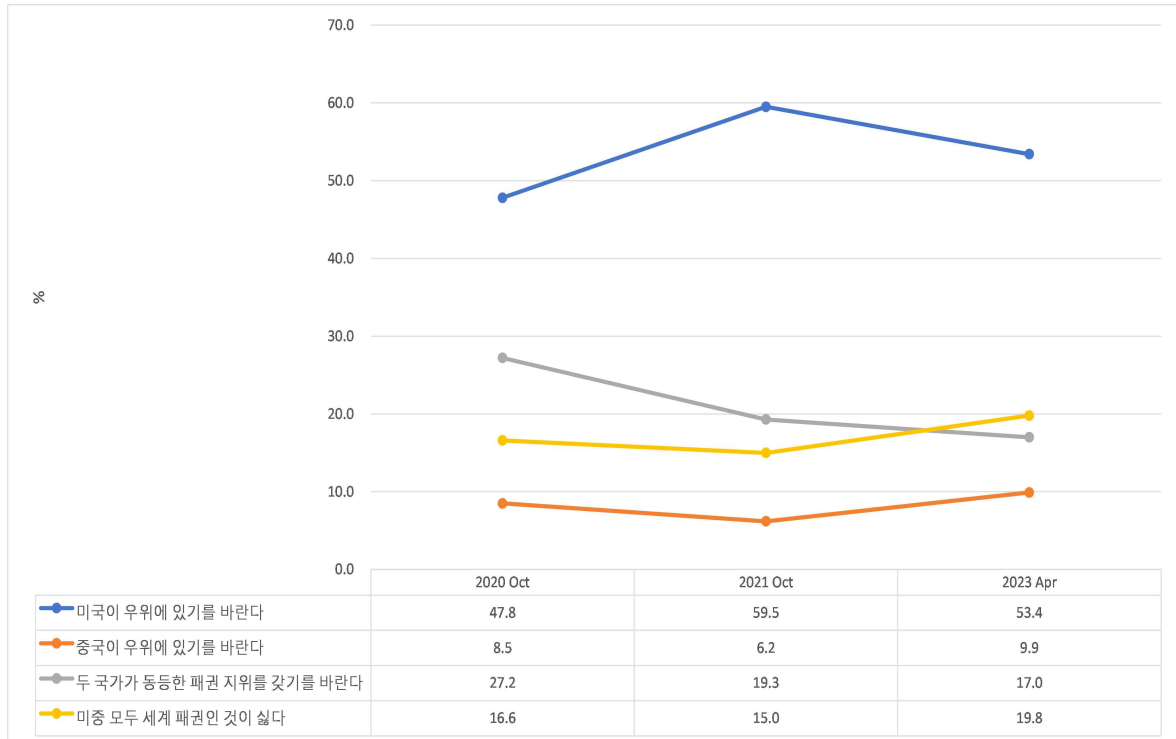
<표 V - 1> 한중관계가 나빠진 이유

(단위: %)

	중국 책임	한국 책임	한중 모두 책임	국제환경 때문
2022 Apr	57.1	4.2	24.9	13.8
2023 Apr	40.6	16.3	33.8	9.3

2. 미중의 패권경쟁에 대한 태도

<그림 V - 2> 미중의 패권경쟁에 대한 태도



■ 조사문항

- “미중이 경제와 안보에서 패권을 두고 전방위적인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미중경쟁에서 어느 국가가 우위에 있기를 바라십니까?”
 - 1=미국이 우위에 있기를 바란다; 2=중국이 우위에 있기를 바란다; 3=두 국가가 동등한 패권 지위를 갖기를 바란다; 4=미중 모두 세계 패권인 것이 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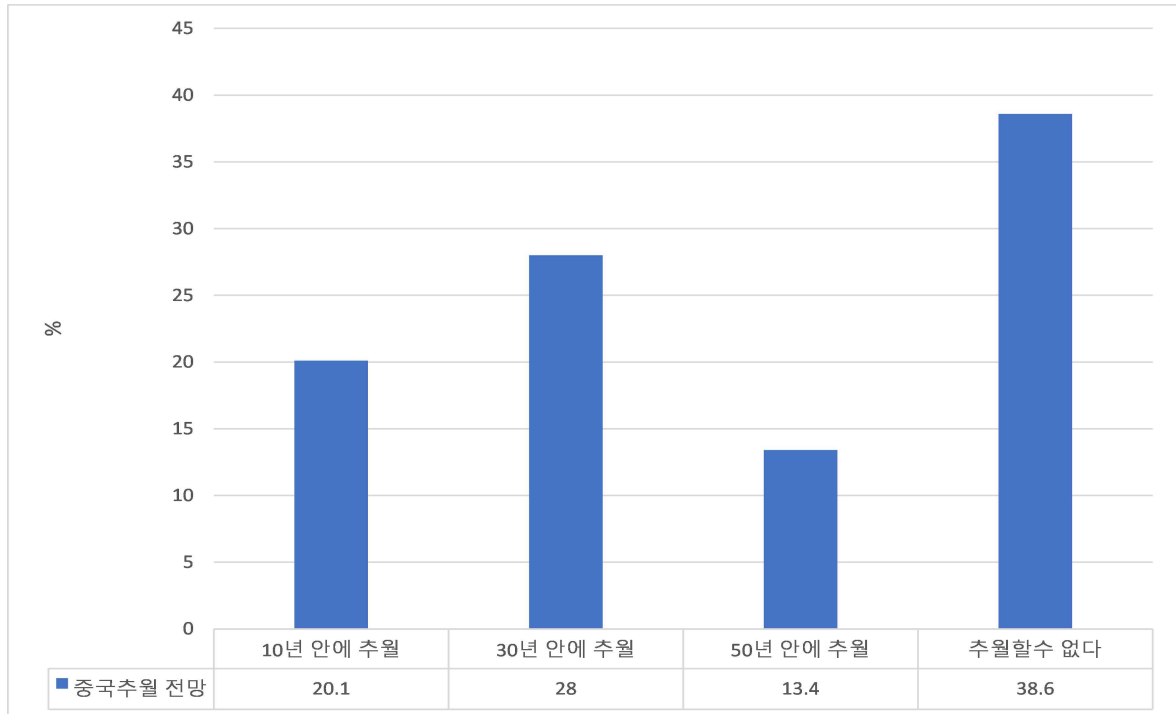
■ 미국 패권을 바라는 응답자 감소

- 미중경쟁 심화 속에서 최근 강화되는 한미관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위에 서기를 바란다는 응답은 21년 10월 조사보다 약 6% 감소하고, 중국이 우위에 있기를 바라는 응답은 3.7% 증가함.
- 이 문항이 처음 조사된 2020년과 비교해 볼 때, 미중이 동등한 패권 지위를 가지기를 바란다는 응답이 큰 폭으로 감소함(10.2% 감소).
 - 미중 모두 패권이 되는 게 싫다는 응답도 2020년 조사보다 3.2% 늘어남.

-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국력 신장에도 불구하고 미중경쟁 격화로 양국 사이에서 외교적 운신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같은 맥락에서 미중 패권경쟁에 따른 피로도 증가로 인해 양국이 패권이 되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3. 중국의 미국 추월 가능성

<그림 V - 3> 중국의 미국 추월 가능성



■ 조사문항

- “중국의 국력이 미국을 따라잡아 새로운 초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답을 선택해 주십시오”
 - 1=10년 안에 중국은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2=30년 안에 중국은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3=50년 안에 중국은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4=중국은 미국을 결코 추월할 수 없을 것이다.

■ 중국의 미국 추월 가능성 전망 높음

-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는 응답이 61.4%로 추월할 수 없다는 응답 38.6% 보다 약 23% 높음.
- IMF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비율(70.4%)로 중국의 추월을 예상함(<표 V - 2>).
 - 이는 IMF세대가 국제정치 및 경제에 대한 이해를 본격적으로 형성하는 시기인 10대와 20대에 국제금융 위기로 자신들의 취업시장 진입의 어려움을 겪는 동안 중국의 경제성장을 목격하면서 중국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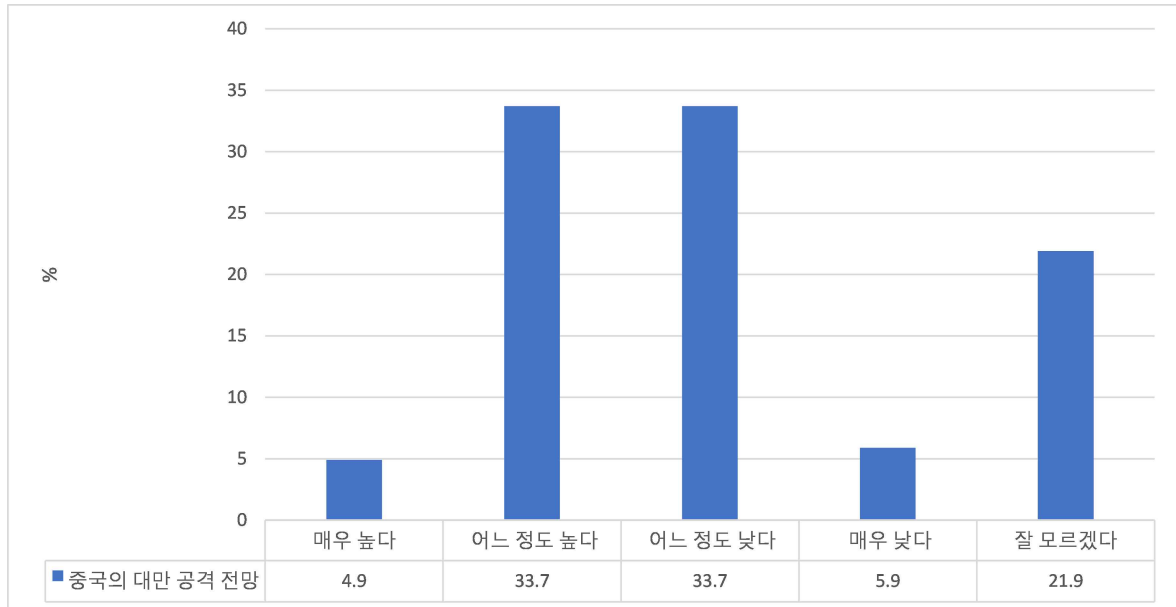
<표 V - 2> 중국의 미국 추월 가능성 전망: 코호트별

(단위: %)

	전쟁세대	산업화세대	386세대	X세대	IMF세대	밀레니얼
추월할 것이다	57.1	61.4	59.0	62.4	70.4	58.3
추월할 수 없다	42.9	38.6	41.0	37.6	29.6	41.7

4. 중국의 대만 공격 전망

<그림 V - 4> 중국의 대만 공격 전망



■ 조사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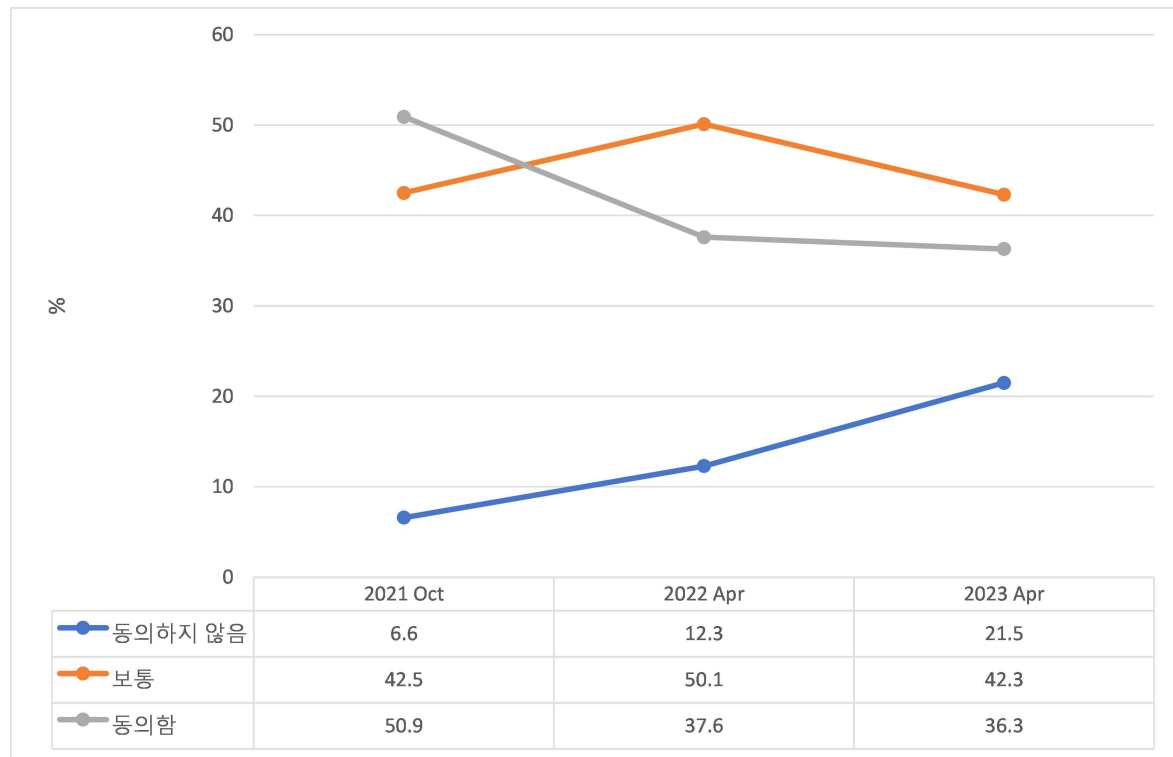
- “중국이 가까운 시일 내에 대만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다; 3=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낮다; 4=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5=잘 모르겠다.

■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이 비슷한 수준

- 높다: 38.6% vs 낮다: 39.6%
 -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약 40%는 중국의 공격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음.
- 응답자의 5분의 1이 넘는 약 22%가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해 이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국민이 상당수임을 알 수 있음.

5. 양안 관계: 중국-대만 분쟁 시 한국 개입 필요성

<그림 V - 5> 중국-대만 분쟁 시 한국 개입 필요성



■ 조사문항

- “중국이 대만을 힘으로 병합하려 한다면, 한국은 이를 막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보통이다; 4=어느 정도 동의한다; 5=매우 동의한다.
 - 1+2=“동의하지 않음”; 3=“보통”; 4+5=“동의함”

■ 2021년 이후 중국-대만 분쟁에 한국 개입 동의하는 비율 첫 감소

-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한국이 이를 막는 데에 동참해야 한다는 응답은 36.3%로 2년 전 조사에 비해 약 15% 가까이 줄어듦.
- 이러한 결과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교 범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와 대조를 이룸(<표 V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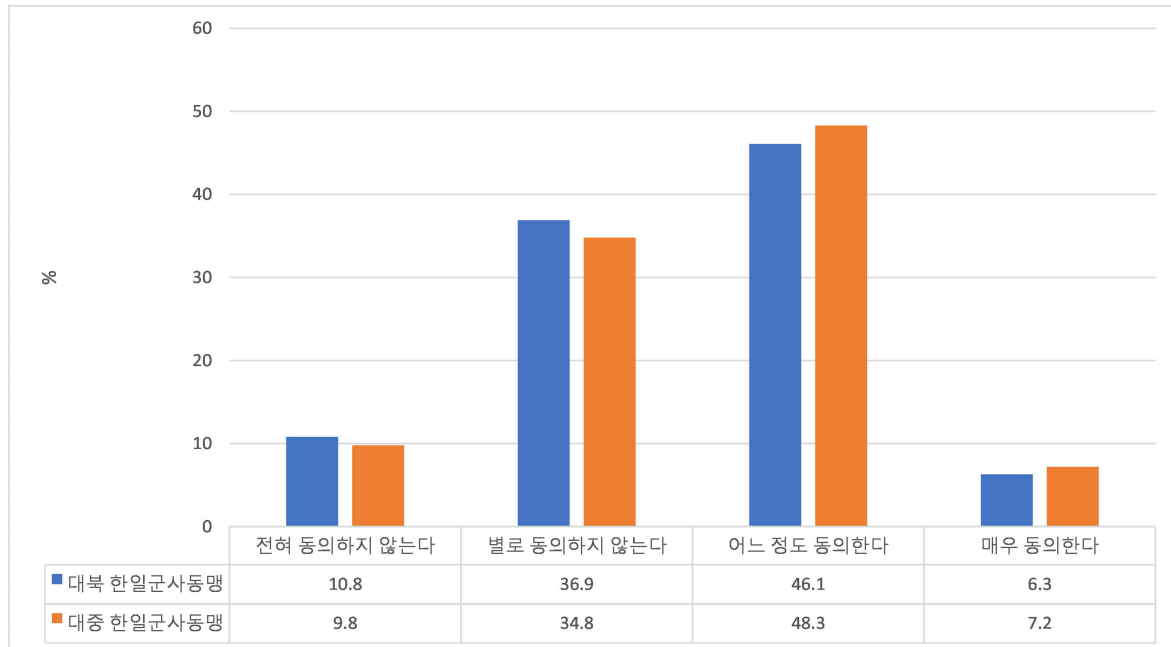
<표 V - 3> 한국의 외교범위

한국의 외교 범위	비율(%)
국제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참여	52.8
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문제에만 적극적으로 참여	10.5
한반도 주변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문제에만 적극적으로 참여	24.6
한반도의 중요한 문제에만 적극적으로 참여	9.2
한국은 되도록 국제정치에 참여하지 않아야	3.0

- 한국이 국제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 52.8%에 비해 16%나 낮은 대만 개입 동의 비율은 규범적 태도와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 사이에서 인식의 괴리를 보여줌.
 - 즉, 규범적으로는 국제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 사안에서는 국가와 개인이 치러야 하는 구체적 비용을 고려하기 때문으로 보임.
- 이러한 결과는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과 같은 국제사회 관여와 관련해 국민의 규범적 지지와 별개로 그 지원이 국가적, 개인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반대에 부딪힐 수 있음을 시사함.
- 이러한 규범과 현실 사이의 이중적 태도는 지지정당과 관계없이 관찰됨.
 - 지지정당 혹은 지지정부 여부와 무관하게 중국의 대만 병합 저지 노력에 동참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6. 한일군사동맹

<그림 V - 6> 한일군사동맹에 대한 태도



■ 조사문항

-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은 군사동맹을 맺어야 한다.”
-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은 군사동맹을 맺어야 한다.”
 -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어느 정도 동의한다; 4=매우 동의한다.

■ 한일군사동맹에 동의하는 비율이 과반

-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군사동맹에 동의(“어느 정도 동의”+“매우 동의”)하는 비율이 52.4%로 동의하지 않는 비율 47.7%보다 4.8% 높은 것으로 집계됨.
-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군사동맹에 대한 지지보다 약 3% 많은 55.5%의 응답자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군사동맹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러한 높은 한일군사동맹에 대한 지지율은 미중경쟁 격화로 역내 신냉전 구조가 형성되면서 국민 다수가 한일군사 협력을 지역 안보 차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으로 판단됨.

■ 상반된 한일군사동맹에 대한 인식을 다수 국민이 일관되게 유지

- 두 문항을 결합하여 3점 척도로 한일군사동맹에 대한 태도를 지수화하여 분석하였음.
 - 0="대북 한일동맹 및 대중 한일동맹 모두 동의"; 1="대북 및 대중 한일동맹 중 하나만 동의"; 2="대북 및 대중 한일동맹 모두 동의하지 않음"
- 대북 한일동맹과 대중 한일동맹에 모두 동의한 비율이 45.3%인 반면 두 동맹 모두에 부정적 견해를 가진 응답자는 37.5%로 나타남.
 - 두 동맹 중 하나에만 긍정적 태도를 보인 비율은 17.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상당수의 국민이 일본과의 군사동맹에 상반된 인식을 일관성 있게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

■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한일군사동맹 지지

- 한일군사동맹 지수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지정당에 따라 한일군사동맹에 대한 태도 차이가 뚜렷이 보임(<표 V - 4>).

<표 V - 4> 대중 및 대북 한일동맹에 대한 찬반: 지지정당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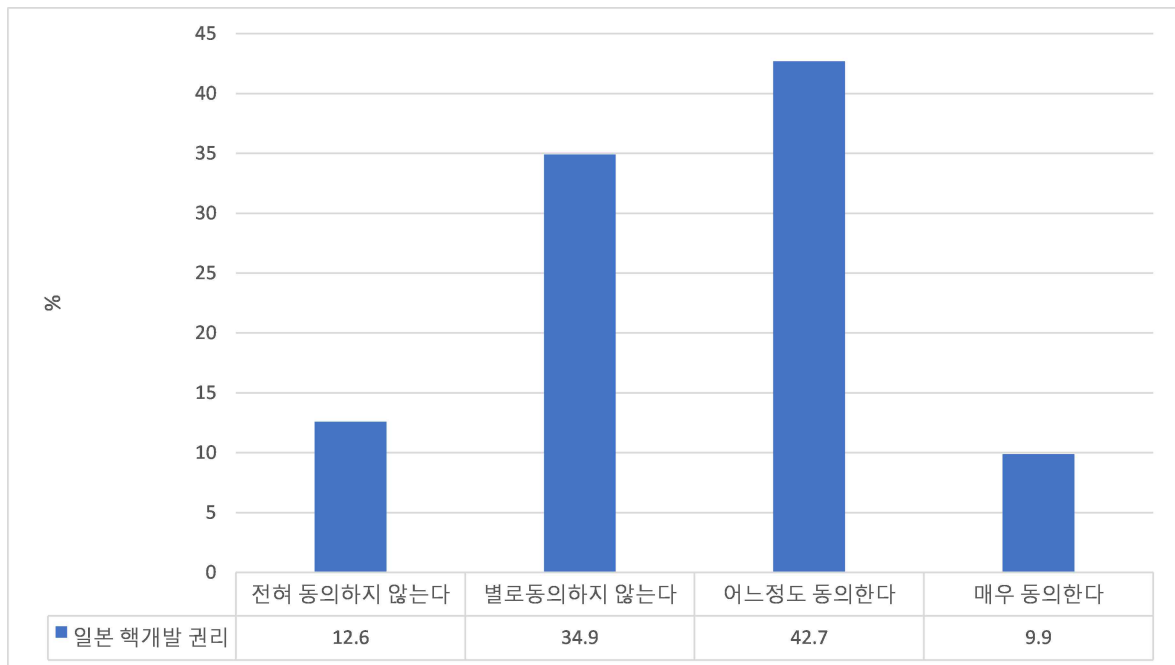
	국민의힘	민주당	지지정당 없음
대북 및 대중 한일동맹 모두 반대	23.8	47.5	40.7
대북 및 대중 한일동맹 중 하나만 찬성	14.1	18.3	20.1
대북 및 대중 한일동맹 모두 찬성	62.2	34.3	39.3

- 국민의힘 지지자의 3분 2에 달하는 62.2%가 대북 및 대중 한일군사동맹을 모두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반면 민주당과 무당파의 대북 및 대중 한일군사동맹 지지율은 각각 34.3%, 39.3%로 국민의힘 지지자와 큰 차이를 보임.
- 코호트별로 살펴보면 밀레니얼세대가 한일군사동맹에 가장 높은 비율로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 밀레니얼세대의 42.4%가 한일군사동맹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합리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미래세대로 정치적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밀레니얼세대가 가장 높은 비율로 한일군사동맹에 부정적이라는 사실은 향후 한일 양국이 군사협력 강화 시 이 세대에 대한 설득이 국민 지지 기반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임을 시사함.

7. 일본의 핵개발 정당성

<그림 V - 7> 일본의 핵개발 정당성



■ 조사문항

- “일본도 핵으로 위협받는다면 자국 안보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할 권리가 있다.”
 -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어느 정도 동의한다; 4=매우 동의한다.

■ 과반 응답자가 일본의 핵 개발 정당성 인정

- 52.6%가 일본에 핵 개발 권리가 있다(“어느 정도 동의”+ “매우 동의”)고 응답함.
- 한국의 핵 개발 지지 여부와는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즉, 한국의 핵 개발을 지지 혹은 반대하는 태도는 일본의 핵 정당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설명하지 못함.
- 지지정당에 따라 응답 양상에 차이가 나타남(<표 V - 5>).
 - 국민의힘 지지자가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파 응답자 보다 약 10% 높은 비율로 일본의 핵

무기 개발 권리에 동의함.

<표 V - 5> 일본의 핵개발 정당성: 지지정당별

(단위: %)

	국민의힘	민주당	지지정당 없음
동의하지 않는다	40.6	51.2	51.9
동의한다	59.4	48.8	48.8

- 코호트별로 살펴보면 전쟁세대가 일본의 핵 개발 권리에 가장 높은 비율로 동의함(<표 V -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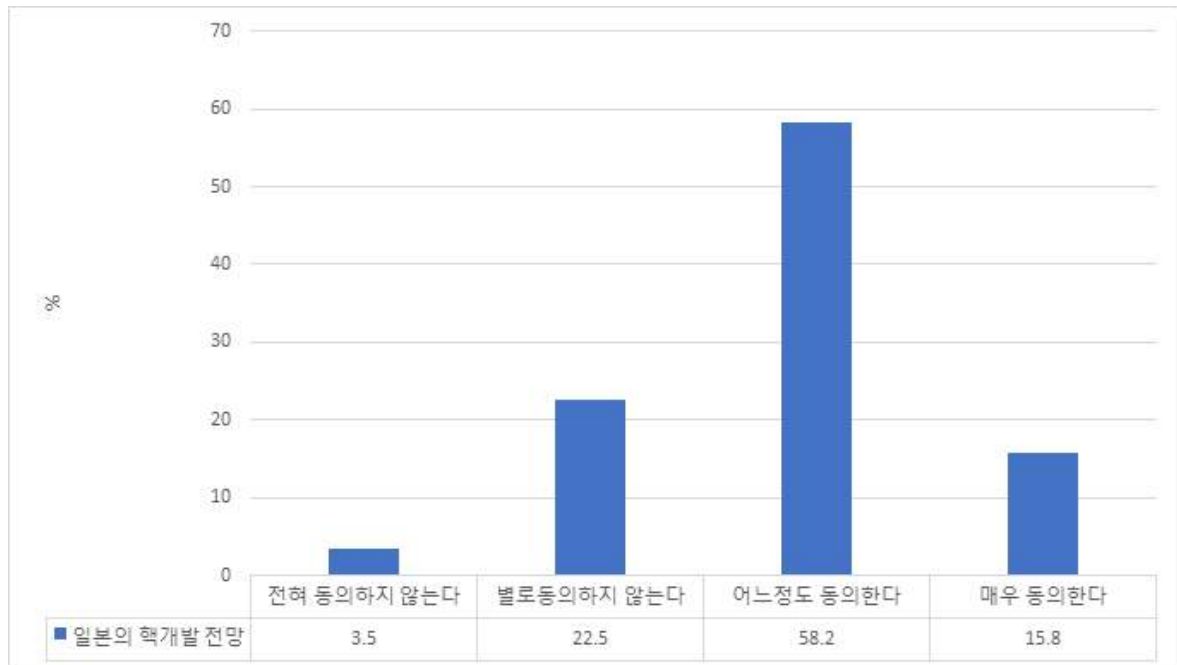
<표 V - 6> 일본의 핵개발 정당성: 코호트별

(단위: %)

	전쟁세대	산업화세대	386세대	X세대	IMF세대	밀레니얼 세대
동의하지 않는다	32.5	51.5	50.5	48.3	44.7	47.9
동의한다	67.5	48.5	49.5	51.7	55.3	52.1

8. 일본의 핵개발 전망

<그림 V - 8> 일본의 핵개발 전망



■ 조사문항

- “일본도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어느 정도 동의한다; 4=매우 동의한다.

■ 응답자 74%가 일본의 핵개발 가능성 예측

- 일본의 핵무기 개발 정당성에 동의하는 응답 비율(52.6%)보다 약 22% 높은 74%가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됨.
- 다수 국민이 일본의 재무장이 향후 보다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음.
- 또한 응답자 62%가 ‘미국이 일본 재무장을 돕고 있다’고 평가했음. 이러한 인식은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함.
 -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핵 보유 찬성 의견도 향후 더욱 증가 혹은 강화될 수 있음.

Executive Summary

K I N U
통일의식
조사



VI

한미정상회담이 여론에 미친 영향

구본상 (충북대학교)

VI. 한미정상회담이 여론에 미친 영향

1. 주변국 호감도

<표 VI - 1> 한미정상회담 전후 주변국 호감도 변화

국가	정상회담 이전	정상회담 이후	증감
미국	1.55	2.08	0.53 (▲*)
중국	-1.05	-1.07	0.02 (▼)
일본	-1.34	-0.62	0.72 (▲*)
러시아	-1.86	-1.38	0.48 (▲*)
북한	-2.22	-2.22	0.00

주: *: t-test에서 $p < 0.05$.

■ 조사문항

- “귀하께서는 _____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혹은 얼마나 싫어하는지 -5점에서 5점 사이의 점수를 매겨주십시오.”
- -5=매우 싫음; 0=보통; 5=매우 좋음.

■ 한미정상회담 전후 변화

- 올해 통일의식조사 표본추출은 ‘워싱턴선언(Washington Declaration)’ 전후로 대략 절반씩 (이전 504명, 이후 497명) 이루어졌음. 이는 일종의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 조건을 형성함. 4월 27일 전후 여론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이를 워싱턴선언의 효과로 볼 수 있음.
-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 일본,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는 상승한 반면, 중국과 북한에 대한 호감도에서 유의한 변화는 없음. 특히, 미국에 대한 인식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전반적으로 향상됨.⁶⁾
-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기시다 총리의 답방(조사 시점에서는 예정) 외에도 한미정상회담의 결과가 미국과의 관계를 넘어 일본과의 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리라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 상승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후 급속하게 감소했던 호감도가 전쟁 장기화로 언론 노출이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애초 우려와 달리 한미정상회담에서 러시아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6) 예를 들어,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리더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비율도 한미정상회담 이후 유의하게 증가함.

2.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 인식: 현재의 위협

<표 VI - 2> 한미정상회담 전후 주변국을 현재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정도 변화

국가	정상회담 이전	정상회담 이후	증감
미국	3.18	3.09	0.09 (▼)
중국	4.59	4.79	0.20 (▲*)
일본	4.35	4.26	0.09 (▼)
러시아	4.55	4.73	0.18 (▲*)
북한	5.34	5.54	0.20 (▲*)

주: *: t-test에서 $p < 0.05$.

■ 조사문항

- “귀하는 다음의 나라들이 현재 한국에 군사적으로 얼마나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전혀 위협이 아니다; 4=보통이다; 7=매우 위협이 된다.
 - 4점보다 큰 값은 현재 군사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미국을 제외한 4개국을 모두 현재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음.

■ 한미정상회담 전후 변화

-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일본에 대한 군사적 위협 인식 수준은 감소한 반면,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 수준은 증가하였음. 특히,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인식 수준에서의 변동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핵확장억제를 비롯한 여러 쟁점에서 미국과 밀착한 결과, 이에 대응한 중국, 러시아, 북한의 위협은 증가하였다고 이해한 것일 수 있음. 한미정상회담이 단순히 한미관계에 관한 인식이 아닌 한국-미국-일본 vs. 중국-러시아-북한 간 대립 구도를 인식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3.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 인식: 미래의 위협

<표 VI - 3> 한미정상회담 전후 주변국을 미래의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정도 변화

국가	정상회담 이전	정상회담 이후	증감
미국	3.43	3.34	0.09 (▼)
중국	4.85	4.94	0.09 (▲)
일본	4.63	4.42	0.21 (▼*)
러시아	4.70	4.85	0.15 (▲*)
북한	5.31	5.53	0.22 (▲*)

주: *: t-test에서 $p < 0.05$.

■ 조사문항

- “귀하는 다음의 나라들이 장차 한국에 군사적으로 얼마나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전혀 위협이 아니다; 4=보통이다; 7=매우 위협이 된다.
 - 4점보다 큰 값은 장차 군사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한미정상회담 전후 변화

- 미국을 제외한 4개국이 모두 잠재적으로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일본을 군사적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수준은 감소한 반면,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 수준은 증가하였음. 특히, 일본, 러시아, 북한에 대한 인식 수준 변동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선행연구(Koo and Choi 2022)에 따르면, 일본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은 장차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정도에 잘 반영됨.⁷⁾ 한미정상회담을 전후로 일본의 미래적 군사적 위협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게 개선되었다는 점은 유념할 만함.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미국과의 밀착이 일본의 잠재적 군사적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감소시킨 것으로 보임.

7) Bon Sang Koo and Jun Young Choi, "Who Takes the Japanese Threat Seriously? A Survey-based Analysis of South Koreans' Perceptions," *Pacific Focus*, vol. 37, no. 2 (2022), pp. 289~315.

4. 남한 핵보유에 대한 태도

<표 VI - 4> 한미정상회담 전후 남한 핵보유 태도 변화

답변	정상회담 이전	정상회담 이후	증감
절대 반대	11.5%	9.3%	2.2%p (▼)
어느 정도 반대	28.6%	30.2%	1.6%p (▲)
어느 정도 찬성	44.6%	47.9%	3.3%p (▲)
매우 찬성	15.3%	12.7%	2.6%p (▼)

주: χ^2 test에서 $p = 0.358$.

■ 조사문항

-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남한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남한의 핵무장을 절대 반대한다; 2=남한의 핵무장을 어느 정도 반대한다; 3=남한의 핵무장을 어느 정도 찬성한다; 4=남한의 핵무장을 매우 찬성한다.

■ 한미정상회담 전후 변화

-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찬성 비율은 59.9%에서 60.6%로 상승했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음.⁸⁾ 즉 남한의 자체 핵무장을 포기하는 대신 확장억제 강화를 명문화한 ‘워싱턴선언’이 한국인의 핵무장 지지 여론 자체를 바꾸었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강한 의견(‘절대 반대’와 ‘매우 찬성’)은 26.8%에서 22.0%로 감소했고, 그만큼 약한 의견(‘어느 정도 찬성’과 ‘어느 정도 반대’)은 증가했다는 점에서 핵무장에 대한 찬반 강도가 다소 약해졌다고 볼 수 있음.

8) 인구학적 변수, 사회경제적 변수, 정치변수(이념, 정당일체감), 성격특성(RWA, SDO) 등 변수를 포함한 회귀분석 모형에서도 한미정상회담 전후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음.

5.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 변화

<표 VI - 5> 한미정상회담 전후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 변화

답변	정상회담 이전	정상회담 이후	증감
전혀 신뢰하지 않음	2.6%	1.8%	0.8%p (▼)
별로 신뢰하지 않음	28.8%	22.5%	6.3%p (▼)
어느 정도 신뢰함	62.7%	68.8%	6.1%p (▲)
매우 신뢰함	6.0%	6.8%	0.8%p (▲)

주: χ^2 test에서 $p = 0.103$.

■ 조사문항

- “귀하께서는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한다면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로 보복 공격한다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 1=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2=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어느 정도 신뢰한다; 4=매우 신뢰한다.

■ 한미정상회담 전후 변화

-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대한 신뢰 비율은 68.7%에서 75.6%로 상승했음.
- 여러 변수를 통제한 통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별로 신뢰하지 않음’ 응답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음.⁹⁾ 즉, 확장억제 강화를 명문화한 ‘워싱턴선언’이 한국인의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9) 인구학적 변수, 사회경제적 변수, 정치변수(이념, 정당일체감), 성격특성(RWA, SDO) 등 변수를 포함한 순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에서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대한 신뢰는 향상되었음.

6. 확장억제의 효과성 평가 변화

<표 VI - 6> 한미정상회담 전후 미국 핵우산 정책의 효과성

답변	정상회담 이전	정상회담 이후	증감
전혀 동의하지 않음	5.2%	0.8%	4.4%p (▼)
별로 동의하지 않음	29.0%	28.5%	0.5%p (▼)
어느 정도 동의함	57.9%	65.8%	7.9%p (▲)
매우 동의함	7.9%	5.4%	2.5%p (▼)

주: χ^2 test에서 $p < 0.001$.

■ 조사문항

- “미국의 핵우산 정책 때문에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주장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어느 정도 동의한다; 4=매우 동의한다.

■ 한미정상회담 전후 변화

-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미국의 핵우산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긍정 비율은 약간 증가함.
- 여러 변수를 통제한 통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미정상회담이 핵우산 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약하게나마 정(+)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¹⁰⁾ 즉, 확장억제 강화를 명문화한 ‘워싱턴선언’이 미국의 핵우산 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임.

10) 인구학적 변수, 사회경제적 변수, 정치변수(이념, 정당일체감), 성격특성(RWA, SDO) 등 변수를 포함한 순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에서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핵우산 정책의 효과성 인식은 미세하게 증가하였음.

